



## 언론 보도에 나타난 가짜뉴스 담론의 속성과 사회적 실천 방향

강주현 부산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강사

### The Attributes of Fake News Discourse and the Direction of Social Practice in Media Reports\*

Ju Hyun Kang\*

Instructor, Dept. of Communi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study sought to identify the fake news properties of our society through fake news discourse covered by media, and to find out how discourse on fake news is formed by each actor through a critical discourse analysis method. It also looked at how the discussion of social practice could be changed depending on the discourse about fake news. The case of fake news presented in the media coverage of this study mainly involved subjects of the political sphere. In Korean society, the concept of fake news mainly referred to political falsehoods circulating socially, unlike the misinformation of the mainstream media as insisted upon by U.S. President Trump. All news outlets, in common, have taken the fake news issue seriously. Media reports were concerned about the possible damage and loss of image that fake news could place upon the victim, causing social confusion and distortion of public opinion. Political power evaluated its position on fake news or related issues according to the political camp's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rather than addressing ideal norms such as truth-seeking or freedom of expression on the fake news issue. In particular, the ruling party and government agencies, which have political power, constantly criticized fake news and urged related agencies to take strong action. The opposition party also chose to take legal action when there was unfavorable fake news. However, the cases of fake news stigma and attacks introduced in the media reports were controversial in many respects. The stigma of fake news regarded suspicions on public affairs as fake news and was used as a means of avoiding responsibility by the parties. Further, it allowed them to be buried in partial factual errors rather than contextual discourse, and replaced the other side's interpretation with factual arguments rather than taking a communicative approach in the conflict situation, stigmatizing the issue as fake news. It also overlooked the discourse characteristics

---

\* This study was supported by Grant from the KSJCS Research Program (Future Media Research Initiative 2019).

\*\* [kmunhak@hanmail.net](mailto:kmunhak@hanmail.net)

of online users, whose presumptions and logical leaps were large. As a result, the structure of political discourse flowed into a dispute over whether it was true or not without properly discussing the purpose and contextual validity of the discourse. Meanwhile, the media discourse was influenced by political power, the news media, and social contexts through mutual relations. When political power and the media collaboratively formed discourse, the fake news discourse was related to the interests of the political camp. While these media emphasized solutions such as legal regulation and media literacy, they revealed a double standard of advocating for freedom of expression when fake news discourse was politically disadvantageous. On the other hand, when the media integrated external experts and political ideologies at the social context level, the news media had various discussions on fake news discourse, and freedom of expression was more important than legal regulation.

**Keywords:** fake news, fake news discourse, freedom of expression, critical discourse analysis

# 1. 들어가며

우리는 지구가 운동한다는 사실을 감각적으로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고정되어 있고, 다른 행성들이 지구의 주위를 공전한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게 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관찰에 근거해서 천체계의 운동을 설명했다. 천동설에 관한 포톨레마이오스의 기본 이론은 행성들의 운동을 예측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단을 제공하며 수 세기 동안 활용되었다. 물론 행성들의 궤도가 완전한 원이 아닌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이 패러다임은 도전에 직면했다. 하지만 그러한 변칙 사례 역시 당시 과학자들은 주전원과 이심원의 궤도를 도입해서 천동설을 기준으로 행성 운동을 설명했다. 그런데 달력의 개혁은 변칙 사례들의 해소와 정확한 이론의 필요성이 요구되었고, 천동설 패러다임이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지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코페르니쿠스는 천동설이 아닌 지동설을 대안이론으로 제시했고, 케플러, 갈릴레이 등이 그것을 뒷받침함으로써 과학 혁명은 일어났다(Ladyman, 2001).

사실이 비교적 명확한 과학적 진실조차도 들여다보면 무수한 쟁점이 있고, 진실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다. 과학에 바탕한 사회적 이슈 역시 그런 사례가 있다. 2008년 4월, MBC PD 수첩은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내용의 탐사 보도를 방송하며, 광우병에 걸린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 수입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다 고 주장했다. 당시 농림수산물부가 정정보도를 청구한 사안에 대해 2011년 대법원의 다수 대법관은 보도 내용 가운데 ‘한국인 중 약 94%가 엠엠(MM)형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약 94%에 이른다’는 보도가 과학적 사실이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단정적인 내용을 주장하는 보도가 허위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소수 입장의 대법관들은 사소한 부분의 오류나 수치적 과장이 있더라도 엠엠(MM)형 유전자와 인간 광우병 발병의 상관관계를 과학적으로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다(대법원, 2011).

이처럼 과학적 사실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발생하는 무수한 사건과 이슈를 두고서 진실이 무엇인지를 판단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인 경우가 많다. 물론 어떤 사실에 관한 입증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담론의 맥락에서 보면 여러 사실들 가운데 어떤 측면의 부분적 사실이 강조되느냐에 따라 또 다른 진실이 만들어질 수 있다.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반된 입장의 공방이나 정치적 쟁점의 대립 과정 등이 그런 점을 보여준다. 만약 어떤 의혹 제기에 관해 곧바로 사실 입증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추후에 사실이 밝혀질 여지가 있다면 진실과 거짓을 판별하기란 더 어렵다.

특히 사회적 담론과 사실은 그 사회의 담론 경쟁의 결과이며, 사회적 진실은 그 사회의 정치, 문화, 사회적 권력 관계와 밀접하다(Deligiaouri, 2018; Fairclough, 1992; Hardy & Phillips, 2002; Wihbey, 2019). 따라서 진실을 논하고 상반된 생각이 소통하기 위해서는 부분적 사실의 진위에 집착하기보다 담론의 의도나 맥락을 파악하는 접근이 더 필요할 수 있다. 또한 하나의 진실만이 강요되기보다 상반된 시각의 담론이 병존하고 경쟁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 조성이 더 필요하다.

최근 들어 가짜뉴스에 관한 담론이 부각되고 관련된 연구들이 이어지고 있다(오세욱·정세훈·박아란, 2017; 이완수, 2018; 황용석·권오성, 2017). 언론의 오보는 오랫동안 늘 있어왔지만, 최근 국내외의 가짜뉴스 담론은 사회적으로 유통되는 허위 사실에 대한 문제의식에 가깝다. 특히 피해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가짜뉴스 때문에 매우 억울하고 회복되기 어려운 이미지 상처를 입을 수 있다. 또한 가짜뉴스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여론의 왜곡을 야기하는 등 여러 사회적 폐해를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최근 가짜뉴스에 관한 논의들은 정치적·경제적 목적으로 악의적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다는 인식을 전제로 법적, 사회적 해결 방향을 모색한다(유의선, 2018).

그런데 담론은 그 사회를 제대로 반영하고, 현상에 관한 본질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기보다 그 시대 권력 관계, 지식 등 여러 요소가 결합되어 나타나는 산물에 불과하다. 기존의 비판적 담론 분석 연구들은 사회적 지식과 담론들이 권력과 사회 구성원의 이해관계에 따라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밝혀왔다(Fairclough, 1992; Hardy & Phillips, 1999). 가령, 푸코는 1800년대 비혼모에 관한 담론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던 비혼모에 불리한 담론이 형성되고, 이것이 오랫동안 비혼모를 차별하는 근거로 활용되었다고 지적한다(Carabine, 2001). 즉 한 시대의 특정 담론은 주로 권력과 지식에 의해 구성되고, 그 담론은 사회적 실천 방향에까지 영향을 발휘했다.

가짜뉴스에 관한 담론은 허위 사실 유포라는 잘못된 행위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탈 진실의 시대에 과학적 사실이 아닌 사회적 사실(social fact)을 두고서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선명하게 구별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다. 또한 가짜뉴스 담론이 구체화되고 해결책이 제도화되는 과정은 정치 권력, 사안과 관련된 각 주체의 이해관계, 상반된 시각의 의견 등이 충돌할 수밖에 없다. 가짜뉴스에 관한 담론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따라 규제를 강화할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지, 팩트 체크나 미디어 리터러시 등의 다른 대안을 모색할지 등의 사회적 실천 방향까지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가짜뉴스에 관한 담론은 단순히 선/악의 이분법적 구도에서 탈피해 '가짜뉴스'라는 용어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가짜뉴스에 관한 담론 형성 과정이 어떠한

지를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담론 형성 과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때 가짜뉴스에 관한 사회적 논의 역시 균형적 접근이 이뤄지며 문제점 역시 합리적으로 보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국내에서 가짜뉴스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되는 시기인 2018년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가짜뉴스 담론에는 어떠한 사례가 있고, 그것이 가진 속성은 무엇이며, 가짜뉴스 담론이 정치 권력과 언론, 사회 여러 주체들을 통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그 결과에 따라 사회적 실천 논의가 규제와 표현의 자유라는 대립항 가운데 무엇이 좀 더 비중을 두게 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8년 언론 보도 가운데 가짜뉴스를 다룬 보도 자료를 수집했고, 비판적 담론 분석 방법(CDA, Critical discourse Analysis)으로 분석했다.

## 2. 이론적 배경

### 1) 가짜뉴스 정의의 속성적 한계

가짜뉴스를 정의하기란 쉽지 않다. 왜냐하면 가짜뉴스의 정의는 무슨 속성에 주목하느냐와 어떠한 기준으로 분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벤달과 로버슨(Bendall & Robertson, 2018)은 가짜 정보 생산이 최근 일어나는 현상이라기보다 마키아벨리의 권모술수, 20세기 PR, 세계 대전에서 심리전, 미디어 왜곡 등 오랫동안 권력자에 의해 이뤄진 역사성을 띠고 있다고 지적한다. 최근 늘어난 가짜뉴스라는 표현은 트럼프 정부처럼 포퓰리스트 정부가 불편한 뉴스를 정당화하지 않기 위해 언급되었다고 주장한다.

가짜뉴스에 관한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가짜뉴스의 속성으로 허위, 고의성, 뉴스 형식이 강조된다. 오세욱, 정세훈, 그리고 박아란(2017, 6쪽)은 가짜뉴스를 “정치적, 경제적 목적으로 뉴스 형식을 차용하여 만들어 낸 허위 및 거짓 정보”라고 정의했다. 황용석과 권오성(2017, 61-68쪽)은 가짜뉴스를 넓게 바라보면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정보, 루머, 풍자, 기존 언론사의 오보나 왜곡 보도까지 포함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가짜뉴스를 좁게 정의하면 “언론 보도의 진실스러움만을 훔친 기만적 정보”라고 정의한다. 유의선(2018)은 가짜뉴스의 법적 규제 필요성을 주장하는 맥락에서 가짜뉴스를 판단할 때 살펴 볼 주요 속성으로 허위, 언론 보도 형식, 실질적 피해, 고의성 등을 제시한다.

이러한 가짜뉴스 개념은 막연한 허위 사실이나 가짜뉴스의 범주를 구체적 논의 대상으로 좁혀 줄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들 개념은 가짜뉴스의 다양한 속성과 현실적 담론에서 통용되는 의미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포괄성의 범주에서 제대로 설명되지 않거나 논쟁을

필요로 한 요소들이 있다. 사회적 사실(social fact)을 두고 '이것은 명백한 거짓이다'라고 어떻게 단정 지을 수 있을 지에 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으며, '고의성' 기준 역시 입증하기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풍자나 패러디 장르처럼 의도적인 가짜뉴스를 포괄하기 어렵다. 또한 가짜 뉴스의 기준으로 '뉴스 형식'을 강조할 때 전제는 객관성 형식을 갖추었던 기존의 뉴스 형식이 진실에 가깝다는 판단이 내포될 수 있지만 과거의 수많은 오보를 떠올리면 그것 역시 적절한 기준이 되기 어렵다.

이 점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탈 진실(post-truth)' 담론의 맥락에서 사회적 사실(social fact)의 진실과 허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의 문제가 있다. 델리기아오리(Deligiaouri, 2018)는 과학적 증거에 의존하는 과학적 진실과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진실은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사회적 진실은 그 사회의 권력 관계와 무관할 수 없으며 진실의 해석은 각기 다른 담론의 경쟁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치 담론에서는 독점적 진실이나 논리적 진실이 강조되면 오히려 사회적 위험성을 초래할 수 있다. 오늘날과 같은 디지털 환경에서는 다른 관점의 정보 소스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의 진실 담론보다 오히려 '탈 진실(post-truth)' 서사가 더 많이 출현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정파적 갈등이 첨예한 사안에서는 동일 이슈에 관한 상반된 정보와 해석, 주장이 펼쳐졌을 때 무엇이 진실이고 어느 주장이 타당한지는 설득력을 잃게 된다. 왜냐하면 정파성이 강한 사람일수록 정파에 유리한 정보는 선택하지만 불리한 정보는 기피하는 선택적 노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Garrett & Stroud, 2014; Stroud, 2010). 상반된 정치 진영의 사람들이 무엇이 진실인지를 두고서 논쟁을 벌이는 동안 정치 진영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는 집단 극화(group polarization) 현상이 나타나면 진실은 더 이상 무의미해진다(Sunstein, 2009/2011). 이 때 진실은 각자의 정치 진영 입장에서 보고 싶은 것, 믿고 싶은 것에 불과하다.

이처럼 사회적 담론에서 진실이란 과학적 사실과 달리 사회적 요소와 여러 권력 관계 등이 경쟁한 결과일 뿐, 하나의 진실만이 존재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의견이 진영화되고, 집단 극화 현상이 나타나는 사회에서는 진실 판단의 기준이 정파적 입장에서 어떤 사실이 더 유리하고 불리한가로 판가름 된다. 이런 점에서 진짜와 가짜의 이분법적 접근과 하나의 진실만을 강요하는 태도는 진실을 둘러싼 입체적이고 다양한 담론을 제한할 우려도 있다.

둘째, 가짜뉴스를 판단하는 주요 잣대로 '고의성' 역시 가짜뉴스 생산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입증하기 어렵다. 게다가 풍자 장르의 경우 기만의 의도가 강하게 드러나더라도 사회 비판의 관점에서 그 점을 나쁘게만 평가할 수 없다. 물론 황용석과 권오성(2017)은 기만, 즉 의도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에 관해 표현물만으로 파악하기 힘들더라도 유추는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2016년 미국 대선 기간 마케도니아에서 경제적 목적으로 가짜뉴스 공장을 차리고, 큰 수익을 올렸던 점은 기만의 의도가 선명한 바 있다. 하지만 루머의 생산과 확산 과정에서는 사람들의 사실 오인과 논리적 비약이 존재할 수 있다. 즉 결과적으로 가짜뉴스라 할지라도 가짜뉴스 생산자나 유통자가 거짓의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명백히 밝히기 어렵다. 그래서 윤성욱(2018, 56쪽)은 가짜뉴스의 법적 규제를 현실화한다는 맥락에서 '목적'의 개념이 법적용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목적성과 관계없이 허위정보를 모두 가짜뉴스로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풍자'처럼 기만의 의도가 선명한 장르는 가짜뉴스라 하더라도 고의성을 근거로 비난하기 어렵다. 1988년 매디슨에서 설립된 <더 오니온(The Onion)>은 풍자 뉴스 매체이다. 인쇄출판으로 시작했지만 1996년 웹 사이트를 개시했고, 2007년 ONN이라는 온라인 방송을 시작했다. 2013년부터는 온라인에서만 방송을 한다. 더 오니온은 CNN.com이 보도한 내용을 비틀어서 다시 방송하곤 했다. 가령, 가수 시러스(Cyrus)의 공연을 CNN.com이 뉴스로 보도하면 더 오니온은 보도 형식으로 왜 시러스가 오늘 아침 탐 기사인지 묻고, 시러스의 공연을 레이디 가가의 공연과 비교한다. 오니온의 보도를 보면 가짜뉴스이지만 정치 경제 영역의 화제는 진짜 뉴스와 별반 다르지 않다. 다만 패러디, 조롱, 비판, 조작 등을 통해 진짜 뉴스를 비판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픽션과 논픽션의 경계가 사라지고, 실제 뉴스와 다른 방법으로 사회를 비판함으로써 가짜가 오히려 더 진실처럼 신뢰받는 하이퍼 리얼리티(Hyper reality)가 된다(Berkowitz & Schwartz, 2016).

<더 데일리 쇼(The Daily Show)>는 늦은 밤의 토크쇼와 유사한 프로그램이다. 전통적 텔레비전 뉴스 세트에서 앵커는 사건 이미지를 설명한다. 정치 정보는 퀴즈 쇼나 게임 등을 통해 전달되고, 외교 정책이나 테러리즘 전쟁 등을 코믹하게 다룬다. 주류 뉴스 미디어의 주장을 거부하고 주관적인 주장을 펼치면서 앵커는 거짓말로 유머를 구사한다. 이 프로그램은 가짜뉴스로 평가받지만, 많은 시청자 확보와 함께 시청자들의 신뢰도가 높다는 역설적인 점도 있다. 그 이유는 이 프로그램이 공공 정책에 관한 이슈와 프레임, 지식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 속 시원히 말하고 싶은 바를 대신 표현하거나 풍자해주기 때문이다. 저널리즘의 표준 관행이나 도덕적 접근을 거부한 이 프로그램은 가짜뉴스로 비난받기보다 새로운 형태의 비판 저널리즘으로 평가 받았다(Baym, 2005; Brewer & Marquardt, 2007).

이처럼 가짜뉴스를 판단하는 잣대로 고의성을 내세우는 것은 행위자의 의도를 증명해야 하는 문제인 만큼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풍자나 패러디와 같은 장르에서는 악의나 고의적 기만성이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나 사람들의 호응 측면에서 본다면 문제 될 여지가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가짜뉴스를 말할 때 '악의'라는 속성은 특정 시각에서 주관적 판단에 불과할 수도 있다.

셋째, 뉴스 보도가 객관적이고 진실성을 갖추었다는 주장은 신화(mythology)에 가깝다. 미국 저널리즘 역사에서 객관성 규범이 형성되기 시작한 시기는 1833년부터 뉴욕 등지에서 신문 한 부를 6센트에서 1페니에 파는 ‘페니 신문(penny papers)’의 등장과 맞물린다. 페니 신문은 독자 확보 경쟁을 위해 특정 정당과 거리를 두는 전략을 취했다. 뿐만 아니라 1870년대와 1880년대의 유권자들은 특정 정당에 충성하기보다 후보, 정당, 정책을 고려한 합리적 선택을 중시하는 운동이 강해졌는데, 신문 역시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특정 정당을 편들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또한 저널리스트들은 고유한 전문 영역을 확인하는 규율을 발전시켰는데 이 과정에서 객관성 윤리는 구체화된다. 1920년대 결성된 미국신문편집인협회가 채택한 저널리즘 윤리 강령에는 정직(sincerity), 진실(truthfulness), 정확(accuracy), 불편부당(impartiality)이 명시되었다. 그리고 과학과 효율성이 중시되던 이 시기에 객관성은 엘리트 지식인들이 추구했던 진보적 이데올로기의 성격도 띠고 있었다(Shudson, 2011/2014, 93-103쪽).

그런데 뉴스가 외형적으로 객관성의 형식을 띠고 있다고 해서 뉴스의 진실성이나 공정성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 박대민(2015)은 언론이 사실성 입증 기제로 다양한 정보원을 인용하지만 인용 사실에 대한 사실성과 적절성은 간과된다는 점을 제기한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추진 논란 기사에서 한겨레 신문과 동아일보는 정보원 인용을 통해 외형적 객관성은 유지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서로 다른 정보원을 통해 4대강 이슈에 관한 상반된 편향성을 드러냈다. 이준용, 양승목, 김규찬, 그리고 송현주(2007)는 한국 언론이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직접 인용 부호의 문제점을 통해 언론 보도가 객관적 형식을 띠고 있지만 보도 내용이 실제 진실과는 무관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언론사들이 직접 인용 제목을 자주 활용하는 이유로 단순 실수나 편집 관행, 선정주의적 요소도 있지만 인용 제목이 형식적으로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고, 편집진에 대한 불공정성이나 편파성 비판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송용희(2005)는 조선일보와 한겨레 신문은 사실성을 입증하기 위해 인용과 숫자를 자주 활용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사회면 기사는 날짜, 돈 액수, 거리, 관련자 수 등을 상세하게 적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한다. 숫자의 정확성은 정보의 사실성과 생생함을 높이기 위한 기제로 주로 사용되었다.

이처럼 전통적 저널리즘에서 뉴스는 객관성의 규범을 강조하며, 정보원 활용과 인용, 숫자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사실성을 확립하고자 했다. 하지만 위의 연구에서 알 수 있듯, 외형적 객관성은 어찌 보면 편향성과 왜곡 보도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방어 기제로 이용되지는 않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다. 이창훈(2012)은 CCTV 영상의 현실 재현조차도 사실에 기반한 객관성을 띠면서도 조작적 현실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한다. 2011년 방송 뉴스에서 활용하는 CCTV의 81.7%는 편집이 이뤄지고, 60%는 디지털 영상 효과, 27%는 시간 흐름 조작, 26%는 반복 재



생을 했다. 하지만 수용자들은 빠른 영상의 흐름 속에 그것을 사실적이고 객관적 영상으로 받아들인다. 사실성을 확립하고자 했던 관행이 한편으로는 사실로 포장된 편향성을 드러내거나 부분적 사실만 강조함으로써 왜곡 전달을 만들어낼 여지가 있는 셈이다.

넷째, 가짜뉴스의 강조는 진실과 거짓이 혼용되어 있는 디지털 문화의 속성을 자칫 편견적 시각으로 재단할 우려가 있다. 앨런(Allan, 2006/2008)은 온라인 공간의 다양한 뉴스와 게시물들이 즉시성을 갖고 있지만 사실과 거짓이 혼재되어 있다고 말한다. 1995년 오클라호마시 폭파 사건을 보더라도 불과 1시간도 지나지 않아 현장 지도, 최근 뉴스, 테러에 사용된 다양한 폭탄 그림까지 온라인 공간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또한 주류 언론사들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내용들을 온라인의 신생 미디어나 온라인 이용자들은 온라인 공간에 올릴 수가 있다. 문제는 온라인 공간에서 다듬어지지 않은 뉴스와 의견이 범람하며 정보의 신뢰성이 무너지는 점이다. 가령, 1996년 롱아일랜드 지역 동부 대서양에서 747 여객기가 추락한 적 있었는데, 인터넷에서는 추락 원인이 미사일 격추설이라는 의혹이 떠돌았다. 또한 영국의 다이애나 황태자 비가 프랑스 파리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때 가짜 현장 사진이 순식간에 확산되기도 했다. 블로그들 역시 근거 없는 소문이나 가십을 상당히 근거 있는 견해처럼 다루곤 한다(Allan, 2006/2008). 이처럼 온라인 뉴스나 게시물은 빠르다는 속성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특징 이면에 진실성, 객관성에서 많은 의심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온라인 공간의 무수한 뉴스와 게시물을 모두 사실 확인하고, 오류를 점검하며 참여자를 제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작업에 가깝고 굳이 그런 활동까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문제이다. 온라인 공간은 상대적으로 정보 검색이 용이하고 반박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그래서 단기간에는 가짜뉴스가 확산되더라도 시간이 흐를수록 정정될 수 있다는 낙관적 기대도 있다. 오히려 거짓과 사실이 공존하는 온라인 공간의 특성을 인정하고, 하이퍼링크나 상호 작용성을 높여 서로 다른 정보나 견해를 병치할 수 있는 구조적 환경을 모색하는 것이 더 현실적일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국내의 기존 연구들은 가짜뉴스에 비판적 시선을 전제로 가짜뉴스에 접근하며 가짜뉴스의 개념을 논할 때 허위, 고의성, 뉴스 형식을 강조한다. 하지만 과연 이 속성이 가짜뉴스의 입체적 속성을 제대로 해명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거짓 루머는 오랜 역사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탈 진실 패러다임에서 접근하면 사회적 사실을 두고 명쾌한 진실을 단언하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가짜뉴스란 어떤 사람들의 주관적 관점에서 거짓이라고 판단하는 정보나 의견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의견의 진영화가 만연하고 무수한 온라인 게시물이 쏟아지는 현실에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고 규제하려는 시도가 어떠한 효용적 가치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오히려 가짜뉴스 담론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처럼 자신에게 불리한 뉴스를 낙인찍어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비판 담론을 억압하는데 이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생긴다.

온라인 저널리즘 환경에서는 전통적인 저널리즘이 강조하던 사실성, 객관성의 규범이 존중 받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온라인 공간을 통해 뉴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사실 못지 않게 해석과 관점을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즉 부분적 사실의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심을 나타낼 수 있는 의제, 어떤 사실들을 나열하고 추론을 한 후 메시지를 생산할 때 그 메시지를 공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해당 뉴스를 선택하고 반응한다(김경희, 2012). 특히 정치적 이슈와 관련된 뉴스에서 정보의 선택적 노출과 의견 진영화는 새삼스러운 현상이 아니다. 근거없는 소문이나 가십을 생산하며 객관성과 정확성이 부족하다고 비판받는 블로그가 전통적 뉴스를 대신했던 점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독자들은 어떤 사안에 관한 분석, 대안 관점 등의 이유로 온라인 공간에서 새로운 매체를 찾아가며(Allan, 2006/2008), 정확한 사실이나 객관성 여부는 뉴스 제작자의 의도와 달리 뉴스 이용자 입장에서는 그다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 개연성이 있다. 따라서 최근 사회적으로 학문적으로 부각된 가짜뉴스 논의가 팩트 체크처럼 부분적 사실 여부만 주목한다면 온라인 이용자의 의도나 담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일부 사실 오류만 주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연구는 현실 공간에서 가짜뉴스의 의미가 기존 연구의 가짜뉴스 정의에 한정되지 않고, 실제 어떻게 통용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가짜뉴스에 대한 문제 의식과 해결 방향 등 가짜뉴스 담론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살펴보고 그 특징을 알고자 한다. 특히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가짜뉴스 담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주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가짜뉴스 담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이며, 가짜뉴스의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가짜뉴스 담론이 어떤 한계점을 갖고 있는지 생각해보고자 한다.

## 2) 표현의 자유와 제한의 배경

한 개인의 존재가 사회 구성 요소의 산물이고, 각자가 고유성을 띠고 있다면(Arendt, 1958/2017) 생각이나 의견, 정치적 입장의 차이는 언제나 존재할 수 있다. 각자가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고 선택과 결정에 따른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소통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서로 다른 의견은 자유롭게 표현될 수 있고, 공감 혹은 논쟁될 수 있어야 한다. 그 이유는 진리란 하나만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On Liberty)〉에서 개인이나 시대는 언제나 오류를 범할 수 있고 의견은 부분적 진실에 불과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는 것이 진리를 찾는 과정이라고 이해한다. 만약 다른 생각이 훗날 옳은 것으로 밝혀진다면 그 생각을 침묵시킨 행위는 진

리를 교환할 수 없도록 한 것이며, 만약 표출할 수 없던 다른 의견이 오류로 나타난다면 진리를 더욱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자유로운 토론이 존재하지 못한다면 특정 교의가 진리로 강조되더라도 사람들에게 감동적인 확신을 창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의미 역시 점차 퇴색할 것이라고 주장한다(Elliott, 2007; Mill, 1859/1992).

표현의 자유(The freedom of expression)는 다양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시대나 사회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절대적 진리에 대한 인식, 결코 동일할 수 없는 정치적 입장을 사람들은 통제 받지 않고, 표현하고 싶은 욕망이 있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발달한 국가들은 다양성이라는 가치 속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원칙을 포용하면서도 표현의 자유가 가진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노력해왔다. 가령, 스웨덴은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미디어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공적 정보에 관한 접근을 용이하게 했다. 이를 통해 언론이 정보 제공과 감시권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시민들이 공적 토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다(Kenyon, Svensson, & Edström, 2017).

하지만 바카리스(Bakalis, 2018)는 맹목적인 표현의 자유가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온라인 공간에서 특정인을 괴롭히는 메시지, 텍스트나 시각적 표현을 활용해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 인종, 종교나 성적 취향, 장애 등에 관한 적대감 표출 등이 발생하면, 피해자들은 온라인 공간에서 참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람 관계 단절, 실직 등의 피해로 확장되고 사회에서 분리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는 추구해야 할 이상적 규범이지만 현실에서 사회 구성원 삶을 위협하거나 사회적 폐해를 초래할 때 보완책을 논의할 수밖에 없다. 박홍원(2004)은 언론 영역에서 자유가 남용되며 발생하는 문제점 때문에 허친스 위원회의 사회책임이론이나 어카운터빌리티(accountability) 개념이 논의되었다고 말한다. 미국의 수정헌법 1조는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지만 내란선동, 음란이나 명예훼손처럼 사회적 해악을 초래하는 발언들은 공익을 위해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사회 전체에서 표현의 자유 역시 공익을 위해서는 적정 범주에서 제한이 가능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스웨덴의 표현의 자유도 저작권과 관련될 때, 술, 담배 등 건강과 관련된 내용일 때, 미성년자 음란물의 경우,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을 때처럼 공동체의 삶을 위협할 때 제한될 수 있다(Kenyon et al., 2017).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한 개인적 피해나 사회적 폐해가 합리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사람들의 막연한 불안 심리에 근거해 부정적 영향이 과장되고 다양한 접근의 논의보다 규제 일변도의 해결책이 쉽게 공감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미디어 수용자에 관한 '제3자 효과(The third-person effect)' 이론은 표현의 자유로 인해 바람직하지 못한 콘텐츠의 폐해 인식이 과대평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사람들은 매스커뮤니케이션의 내용이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과소평가하면서도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더 크게 평가한다. 이를 제3자 효과(The third-person effect)라고 하며, 미디어 내용의 검열을 비판하는 근거로 언급될 수 있다(Davison, 1983).

제3자 효과는 특히 미디어 내용이 안전벨트 이용처럼 바람직한 내용보다 미디어 폭력처럼 부정적인 메시지에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Perloff, 1999). 브루베이커(Brubaker, 2008)는 2004년 미국 대통령 선거 기간에 발생한 메시지들이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을 제3자 효과 이론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설득적 미디어 메시지가 바람직한 메시지일 때보다 바람직하지 못한 메시지일수록 유권자들은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이 해당 메시지에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인식했다. 로와 웨이(Lo & Wei, 2002)는 인터넷 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제3자 효과 연구에서 사람들은 본인은 나쁜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도, 타인에 대한 포르노그래피의 영향은 크게 인식했다.

제3자 효과는 사회적 거리와 밀접한 상관성을 갖고 있다. 즉 본인은 해당 이슈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도 타인에 대해서는 사회적 거리가 멀수록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인식한다. 가령, 호프너와 부하난(Hoffner & Buchanan, 2002)은 텔레비전 콘텐츠의 폭력성 영향을 부모들이 사회적 거리에 따라 다르게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부모들은 본인의 아이들은 비열한 세계 지각, 공격의 용인, 공격적 행동에 관해서 TV로부터 영향이 적다고 생각하면서도 다른 아이들은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인식을 보였다. 윤, 파버, 그리고 샤프(Youn, Faber, & Shah, 2000)는 도박 광고에 관한 제3자 효과 연구에서 카지노나 복권 광고가 본인( $M = 2.31$ ,  $M = 2.09$ )에게는 큰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사회적 거리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르게 인식했다. 조사 대상자들은 도박 광고가 본인의 자녀( $M = 3.36$ ,  $M = 3.42$ )에게는 본인보다 더 영향이 있다고 생각했고, 다른 성인들( $M = 3.83$ ,  $M = 3.78$ )은 도박 광고에 본인의 자녀들보다 더 많이 영향을 받는다고 인식했다.

온라인 공간 역시 부정적인 콘텐츠가 증가할수록 제3자 효과 역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부투로이우, 두라, 우드리아, 그리고 코부(Buturoiu, Durach, Udrea, & Corbu, 2017)의 연구에 따르면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젊은 사람들은 페이스북의 설득적 메시지에 본인이 영향을 받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인식했다. 특히 페이스북을 덜 이용하는 사람일수록 그 차이는 더 크게 나타났다. 골란과 림(Golan & Lim, 2016)은 수니파 무장단체인 ISIS가 온라인 공간에서 조직원을 모집할 때 미국 성인들은 자신이 별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 $M = 1.26$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은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응답자들은 미국의 청년 2.38, 미국 무슬림 3.54, 미군의 청년 무슬림은 4.07 수치만큼 영향을 받는다고 인식했다.

이와 같이 미디어 콘텐츠에 관한 제3자 효과 연구를 살펴보면 온라인 공간이든 오프라인 공간이든 사람들은 미디어 내용이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적게 평가하면서도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과대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사람들은 표현의 자유가 초래할 수 있는 유해 콘텐츠의 문제점을 실제보다 과장해서 인식할 수 있다. 그 결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 등을 실제 위협보다 더 타당하다고 받아들일 우려가 있다. 가짜뉴스의 영향력 역시 제3자 효과가 나타나는 사례이다. 스테파니타, 코부, 그리고 부투로이우(Stefanita, Corbu, & Buturoiu, 2018)는 루마니아 국민들을 대상으로 가짜뉴스에 관해 제3자 효과를 분석했다. 사람들은 본인 ( $M = 3.06$ )이나 내부 그룹의 사람들( $M = 3.67$ )보다 외부 그룹처럼 본인과 동떨어진 사람들 ( $M = 4.5$ )이 가짜뉴스에 더 많이 영향을 받는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가짜뉴스에 대한 제3자 효과가 나타나면 가짜뉴스의 사회적 위협을 실제보다 과장하게 받아들이고, 필요 이상의 법적 규제에 동의할 수 있는 배경이 된다.

마르첼(Marechal, 2015)은 인터넷 영역이 기술 발달과 함께 스케일을 키워가고, 사회 체제의 변화를 유도하지만 인권적 측면에서 취약점이 많다고 주장한다. 개인 정보의 수집, 분석, 공유가 쉬워지며 사생활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인터넷을 모니터링하고 검열할 수 있고, 시민들의 중요 정보 접근과 유포를 차단할 수 있다. 그래서 인터넷 공간이 권력 기구의 감시 영역이 아니라 공적 영역의 토론장이 되고 권력의 중립 지대로 남기 위해서는 공익을 명분으로 한 국가의 개입을 비판적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 3. 연구 문제 및 연구 방법

#### 1) 연구 문제

이 연구는 기존의 가짜뉴스의 정의와 관련 담론을 바탕으로 현실 담론에서 가짜뉴스라는 용어가 어떤 의미로 통용되고, 어떠한 담론적 속성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언론 보도에 나타난 가짜뉴스 담론을 분석해서 가짜뉴스가 현실적으로 어떠한 속성으로 다뤄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그것을 통해 ‘허위’라는 의미 규정 속에 담긴 사회적 맥락을 알아보고, 가짜뉴스 담론의 한계와 배제될 수 있는 담론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각 언론이 다루는 가짜뉴스의 속성에 따라 가짜뉴스에 관한 사회적 실천은 어떠한 방향으로 이뤄지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 문제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연구 문제 1.** 언론 보도에 나타난 가짜뉴스 사례와 문제점은 무엇인가?

**연구 문제 2.** 가짜뉴스에 관한 언론 보도 담론에서 각 주체는 어떻게 담론을 구성하는가?

**연구 문제 3.** 가짜뉴스 담론에 나타난 가짜뉴스 규정의 한계와 배제된 담론은 무엇인가?

**연구 문제 4.** 각 언론사의 가짜뉴스 담론 형성에 따라 사회적 실천 방향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

## 2) 연구 방법

### (1) 비판적 담론 분석 방법

담론(discourse)은 현실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인식, 혹은 지식이다. 이 담론은 사람들의 사회적 인식과 경험을 형성하는데 기여하고, 권력을 발생시키며 사회 현실이나 제도를 구성하는 과정의 토대가 된다. 하지만 담론은 새로운 목소리들이 보태지면서 기존의 담론과 제도의 속성도 변화가 나타난다(Hardy & Phillips, 2002).

언론 보도를 통해 생산되고 공유되는 가짜뉴스에 관한 담론은 사회 구성원의 가짜뉴스에 관한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런데 언론 보도는 사회 현실을 반영하는 듯 하지만 한편으로 살펴보면 언론 보도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현실에 가깝다. 뉴스는 사회 구조와 제도를 바탕으로 사회적 사실을 규정하고, 사회적 의미를 재구성 한다(Tuchman, 1978). 또한 언론 보도의 내용은 기자 개인의 정체성, 언론사의 취재 관행, 조직의 게이트 키핑 과정, 정치 권력과 광고주, 미디어가 가진 이데올로기가 결합된 제도적 산물이다(Shoemaker & Reese, 1996).

강명구(1994)는 조선일보가 1987년부터 1992년까지 지면을 통해 어떻게 경제 위기를 현실 구성하는지 분석하며 담론과 지배 권력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했다. 조선일보는 경제 민주화 담론 시기였던 1987년과 1988년에 노사 문제를 노사 자율에 맡기고 정부의 개입 금지를 주장한다. 1989년부터 1990년까지 경기 하락과 무역 적자의 시기에 조선일보는 경제 위기 담론을 만들어낸다. 그런데 경제 위기라고 할 때 다룰 수 있는 내용은 다양하지만 조선일보는 경제 문제를 경제 성장률, 임금 인상, 물가 상승 등에 집중하며 노사 분규나 과소비에 경제 위기의 책임을 돌린다. 조선일보의 정책 제안 역시 경제 성장에 집중하지만 분배나 복지의 문제에는 무관심한 채 노동 윤리와 소비 윤리를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경제 위기의 책임은 정부가 아닌 과소비를 하고 노동 윤리가 결핍된 대중에게 돌려진다. 이러한 뉴스 담론은 선택과 배제의 원리로 현실을 특정한 방향에서 규정하며 경제 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권력에 대한 동의를 창출하는 효과를 낳는다.

이처럼 언론 보도는 단순히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기 복합적인 사회 제도의

산물로 나타난다. 그리고 언론 보도는 다시 현실 사회를 구성함으로써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즉 미디어가 구성하는 현실 담론은 언론사의 이데올로기, 지배 권력과의 이해관계와 무관하지 않으며 특정 방향으로 규정된 담론은 다시 권력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비판적 담론 분석(CDA, Critical discourse Analysis)은 담론이 어떻게 사회적 지식과 믿음을 재생산하고 사회적 정체성을 형성하며, 사회적 변화를 야기하는지 분석한다(Fairclough, 1992). 예를 들어 푸코는 권력과 지식, 담론이 어떻게 서로 작용하며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지 비혼모 사례를 계보학적으로 분석했다. 1834년 영국의 신규빈법(New poor law) 제정 당시 왕립 위원회에서 사생아를 둘러싼 비혼모와 비혼부에 관한 담론은 다르게 구성되었다. 이 담론에서 사생아는 언급되지 않았고, 비혼부는 모든 책임에서 사면된다. 하지만 비혼모에 관한 담론은 비혼모가 거짓, 성적 문란, 불법 성관계 등 부도덕한 주체로 구성되며 극단적인 비혼모 사례가 근거로 선택된다. 1830년대 당시 영국은 부부와 아이가 있는 중산층 가정을 국가 도덕의 재생산자로 담론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이런 점 때문에 비혼모의 '다름'에 관한 담론은 더 강화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형성된 담론이 오랫동안 영향력을 발휘해 1990년대 초반까지 비혼모 권리에 영향을 주었다(Carabine, 2001).

이 연구에서 가짜뉴스에 관한 언론 보도를 분석하고자 하는 이유는 가짜뉴스에 관한 언론 보도가 그 당시의 여러 사회적 제도와 상호 작용한 산물로 보기 때문이다. 또한 언론사의 이해관계나 이데올로기에 따라 언론사마다 담론이 미묘한 차이를 드러낼 수 있다. 그래서 가짜뉴스 담론은 언론사별로 어떻게 형성되고 있으며,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를 기준으로 볼 때 어떤 방향으로 사회적 실천이 제안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짜뉴스에 관한 담론 역시 폐해에 관한 문제 인식이 커지고, 다른 접근의 담론이 위축될수록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규제는 정당성을 얻게 된다. 반면 가짜뉴스에 관한 담론이 진실과 허위가 애매한 경계선이거나 공적 영역에서 상반된 인식이라는 판단이 들면 가짜뉴스에 관한 문제는 사회적 담론 경쟁으로 해결책에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을 것이다.

이 연구는 하디와 필립스(Hardy & Phillips, 1999)의 담론 분석 연구를 바탕으로 행위자 중심의 접근을 시도했다. 하디와 필립스(1999)는 캐나다의 난민 시스템 사안을 두고서 각 조직들이 어떻게 담론 투쟁을 벌이고 실천하는지를 분석했다. 이를 위해 이민 문제를 다룬 시사만화 분석과 캐나다 난민 시스템의 사례 연구를 결합했다. 시사만화를 분석한 이유는 사람들이 사회 상황을 바라보는 특정 시각과 사회 질서에 관한 담론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만화에 표상된 이민 담론은 정부와 NGO의 주체 위치를 강화하는 구성이 나타났다. 난민에 관한 담론은 가짜 난민, 불법 이주자들이 부각될 경우 정부의 통제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가

무능력하고 잔인할 뿐만 아니라 시스템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담론이 부각될 때 NGO의 존재 목적은 강화된다고 분석한다. 시사만화에서 난민을 묘사할 때 그들이 자율적이고 독립된 존재와 동떨어진 이미지로 그려지고 도움이 필요한 무력한 존재로 재현된다고 한다. 그로 인해 난민들은 권한을 부여받기 위해(empowerment) 필요한 담론을 시사만화에서 지원받지 못한다고 하디와 필립스는 지적한다.

이 연구는 본격적인 분석 이전에 가짜뉴스에 관한 보도를 검토하며 정치 권력, 언론사, 사회적 맥락을 중심으로 가짜뉴스 담론이 전개되는 점에 주목했다. 그래서 하디와 필립스의 연구 분석틀이었던 행위자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우선 가짜뉴스 담론에서 정치권력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가짜뉴스와 관련된 정치인, 이들의 발언, 사실 관계, 가짜뉴스에 관한 입장과 대응 태도 등을 분석했다. 다음으로 가짜뉴스 담론에서 언론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았다. 언론사마다 가짜뉴스에 관해 어떻게 다루고 있으며, 각기 다른 의제 설정과 프레임을 보인다면 그것이 무엇이며 왜 그러한 보도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파악하고자 했다. 사회적 맥락 차원에서는 언론 보도에 다뤄진 가짜뉴스 사례가 무엇이 있고, 이슈가 된 가짜뉴스의 속성은 어떠한지를 분석했다. 또한 오피니언 리더들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어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책으로 연결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 (2) 자료 수집 방법과 특징

언론 보도에 나타난 가짜뉴스에 관한 담론을 살펴보기 위해 이 연구는 자료를 선택할 때 두 차원에서 접근했다. 하나는 정파성의 문제이고 또 다른 하나는 매체의 속성이다. 우선 분석 대상에서 다른 정파성의 언론을 고려한 이유는 언론 보도가 정파성에 따라 동일한 이슈라도 다르게 보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보수 진영의 언론사가 특정 내용을 부각하는 동안 진보 진영의 다른 언론사는 그 사안을 적게 보도하거나 아예 보도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상반된 정치 성향의 언론은 동일한 이슈라도 다른 쟁점을 선택할 수 있다(방성현·이건호, 2013). 다음으로 분석 대상에서 신문과 방송처럼 다른 매체 선택을 고려한 이유는 매체의 속성에 따라 다루는 뉴스 비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일권(2010)은 텍스트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신문사가 방송사보다 법조 기사를 더 많이 다루는 반면 영상 가치를 중시하는 방송사는 신문사보다 재해 뉴스 등을 더 많이 다룬다고 했다. 이처럼 매체에 따라 주목하는 뉴스의 속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가짜뉴스에 관한 보도 역시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 연구는 신문 매체와 방송 매체를 선택했다. 이 연구에서 선택한 분석 대상은 진보 성향이나 친여 성향이 비교적 짙은 매체로 MBC 뉴스(방송 매체)와 경향신문(신문 매체)을 선택했고,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하거나 친여 성향



과 거리가 있다고 판단한 매체로 동아일보(신문 매체)와 SBS 뉴스(방송 매체)를 선택했다.

뉴스 검색 분석 사이트인 빅카인즈(www.bigkinds.or.kr)에서 2018년 1월~12월 언론 보도 가운데 ‘가짜 뉴스’ 키워드를 입력해서 자료를 검색했다. 2018년을 분석 대상으로 한 이유는 이 시기를 전후로 국내에서 가짜뉴스라는 말이 확산되며 가짜뉴스에 관한 문제의식이 부각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후 주류 매체와의 갈등 속에서 가짜뉴스라는 말을 빈번하게 사용하며(Bendall & Robertson, 2018) 이 용어가 국내에도 익숙해졌고, 한국 사회에서는 허위 사실을 비판할 때 가짜뉴스라는 표현이 늘어났다.

자료 검색 결과 경향신문 245건, 동아일보 218건, MBC 뉴스 250건, SBS 뉴스 39건이 검색되었다. 그런데 자료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과 가짜뉴스는 적지 않은 보도가 있었지만 미국의 가짜뉴스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주류 언론과의 갈등 속에서 오보 논란을 주로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에서 이뤄지는 담론은 언론의 오보 논란보다 사회적으로 유포되는 허위 사실에 더 주목하고 있었다. 또 자료들 가운데는 ‘가짜뉴스’ 단어가 포함되지만 ‘역사 속 가짜 이야기’처럼 이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맥락과 다른 내용들이 있었다. 또한 언론사가 기사 수정을 거치며 중복하여 생성된 기사들도 적지 않았다. 그래서 이 자료들을 모두 제외하고 최종 분석에 쓰인 보도 건수는 경향신문 119건, 동아일보 140건, MBC 뉴스 27건, SBS 뉴스 18건이다. 경향신문과 동아일보 자료의 보도 건수에는 스트레이트 기사와 칼럼, 사설 등도 포함되었다. 다만 연구 결과에서 서술할 때 칼럼과 사설 등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점이 드러날 수 있도록 표시하였다.

## 4. 연구 결과

### 1) 언론 보도에 나타난 가짜뉴스의 심각성

가짜뉴스에 관한 언론 보도의 기본 전제는 가짜뉴스가 악의적 의도를 가진 채 거짓 정보를 생산하고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그래서 각 언론은 가짜뉴스에 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낸다. 가짜뉴스에 관한 언론 보도 담론은 공통적으로 가짜뉴스가 ‘당사자에게 절망, 사회에 고통과 혼란, 빈번하게 노출되는, 사생활 파괴, 사회 혐오’ 등의 결과를 초래한다며 가짜뉴스의 심각성을 환기한다. 물론 가짜뉴스에 관한 접근 방향과 비판 강도는 언론사별로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 언론사별로 주목하는 가짜뉴스 소재가 다르며, 가짜뉴스에 관한 태도 역시 이슈나 시기에 따라 언론사별로 차이를 보인다. 그 점을 논하기 전에 우선 언론 보도에 나타난

가짜뉴스 사례가 무엇이 있고, 언론은 가짜뉴스의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며, 가짜뉴스 해법을 어떻게 주장하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MBC 뉴스는 가짜뉴스가 어떠한 사회적 문제를 만들고 있는지를 환기시킨다. MBC 뉴스는 '세월호 루머, 5.18 북한군 개입설' 등에 관한 가짜뉴스 때문에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을 드러내며 가짜뉴스를 일관되게 비판한다. MBC 뉴스의 가짜뉴스 비판 사례를 보면 "(세월호) 유가족을 겨냥한 가짜뉴스는 그들을 이중, 삼중의 절망으로 몰아갔습니다. (중략) "돈벼락 맞았다", "대학교에 특례 입학한다", "공무원 시험 가산점이 있다더라". 세월호 참사 이후 헛소문이 횡행했습니다. 유족은 물론 피해 학교 학생들과 교직원, 지역 주민들까지 괴로워했습니다."(이재민, 2018, 4, 15)라며 가짜뉴스가 피해 당사자에게 주는 정서적 고통을 드러낸다. MBC 뉴스는 5.18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 "시민을 학살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신군부조차 거짓으로 결론 낸 북한군 개입설. 그 가짜뉴스가 38년이 지난 지금까지 유족과 우리 사회를 고통과 혼란으로 몰아가려 하고 있습니다."(배주환, 2018, 5, 17)라며 해당 가짜뉴스가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를 지적한다. 그리고 중앙정보부 전직 직원과 보안사 전직 수사관의 인터뷰를 인용해 5.18 북한군 개입설이 터무니없다는 결론을 내린다(이덕영, 2018, 5, 18). 한편 MBC 뉴스는 연세대학교 바리ICT 연구소의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성인 1천3백여 명을 상대로 뉴스 인식조사를 한 결과 88.6%가 가짜뉴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했고, 60.6%는 가짜뉴스를 실제로 봤다고 답했습니다."(이필희, 2018, 11, 23)라며 우리 사회에 가짜뉴스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음을 알린다.

경향신문의 가짜뉴스에 관한 보도를 살펴보면 정치권이 민감한 가짜뉴스 사례가 무엇이며, 정치권의 가짜뉴스 대응이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알 수 있다. 경향신문은 "'청와대 직원 탄저균 백신 접종설' 등 211건을 가짜뉴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고발했다. 민주당이 고소한 가짜뉴스는 '청와대에서 탄저균을 수입해 청와대 직원만 맞았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2018년 2월 24일까지다'라는 것 등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특활비와 관련된 가짜뉴스도 있다고 민주당은 밝혔다."라며 민주당의 가짜뉴스에 관한 법적 대응을 보도한다(노도현·박순봉, 2018, 1, 29). 민주당은 이후에 총 449건의 가짜뉴스 관련자를 고소·고발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일부 교회는 신도들을 상대로 "민주당은 북한과 같은 공산당", "민주당은 동성애당"이라는 주장이 담긴 강연"이 있었다며 사례를 소개한다(김현술, 2018, 3, 5). 경향신문은 또한 보수 성향 시민들 사이에 떠도는 가짜뉴스에 우려를 드러낸다. 경향신문은 시민 인터뷰를 통해 그 시민의 아버지가 최순실 국정농단 보도 이후 가짜뉴스를 계속 주장하며 태극기 집회에 열성적으로 참여한다고 전한다. 또 다른 시민은 아버지로부터 "박근혜 대통령 무죄사면 및 문재인 대통령 파면 주장부터 19대 대선 부정선거 등 각종 가짜뉴스들"에 관한 문자를 지속적으로

받는다고 했다(류인하, 2018, 3, 17). 경향신문은 또한 유튜브 동영상에 대한 허위정보 테스트를 한 결과 정답률이 40.7%에 그쳐 적지 않은 사람들이 허위 정보 구별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한다(경향신문 디지털뉴스팀, 2018, 10, 10).

SBS 뉴스는 국내의 사례를 통해 가짜뉴스 때문에 제대로 된 공론이 이뤄지지 못하는 측면을 지적한다. 독일에서는 SNS 기업이 가짜뉴스나 혐오 발언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거액의 벌금을 받는다고 소개한다. 물론 가짜뉴스와 혐오 발언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이 뉴스는 독일 경찰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서, 이 두 시안을 뭉뚱그려 가짜뉴스가 인종차별에 대한 증오를 부추길 수 있다고 말한다(배재학, 2018, 1, 3). SBS 뉴스는 인권교육지원법이 동성애를 교육하는 법이라는 가짜뉴스가 개신교와 일부 시민 단체를 중심으로 확산되었기 때문에 결국 법안이 자진 철회되었으며, 가짜뉴스가 정책 결정 과정을 왜곡시킨다고 비판한다(권지윤, 2018, 10, 2).

동아일보는 2018년 상반기에 사실이나 외부 필진의 칼럼, 해외 특파원의 보도를 통해 가짜뉴스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해외의 가짜뉴스 규제를 소개한다. 동아일보는 “세계는 가짜뉴스와 전쟁… 獨 24시간 방치에 640억원 물러” 사실에서 프랑스, 독일 등 세계 각국이 가짜뉴스와 전쟁을 본격화했다고 주장한다. 그와 함께 우리나라 역시 가짜뉴스들이 잘못된 여론을 형성해 불필요한 갈등 유발과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며 비판한다.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법적 대응,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함께 주문한다(동아일보, 2018, 1, 9). 동아일보는 가짜뉴스와 관련된 교황의 발언도 소개한다. 교황은 가짜뉴스가 사탄의 속임수라며 가짜뉴스 확산의 동력이 권력, 소유, 즐기려는 인간의 탐욕 때문이라고 주장한다(손택균, 2018, 1, 26). 동아일보는 외부 칼럼에서 선관위의 한 직원은 매년 허위 사실 공표 적발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표심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가짜뉴스 예방을 위한 확실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이재우, 2018, 3, 6). 동아일보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정보원으로 단식 농성 중이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폭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의 편향적 뉴스 배치 때문에 오보와 편파 보도가 주로 노출되고, 뉴스 이용자들의 조롱까지 이뤄진다고 보도한다(홍정수, 2018, 5, 7). 동아일보는 중앙선관위가 적발한 가짜뉴스 전파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한 후보의 선거 사무소 개소식이 페이스북으로 중계되었는데, 국회의장의 가짜 축전과 축하 화환이 등장해 페이스북으로 실시간 확산되었다는 것이다(황성호, 2018, 6, 7).

이처럼 가짜뉴스에 관한 언론 보도를 살펴보면 각 언론사들은 가짜뉴스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가짜뉴스에 관한 언론 보도들은 가짜뉴스가 특정 사람들에게 피해와 상처를 주고 있으며, 터무니없는 사실로 사회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까지 왜곡시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언론 보도는 가짜뉴스 문제가 우리 사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각국이 해법을 찾고 있으며, 우리 사회도 그런 흐름에서 법적 규제, 미디어 리터러시 등 가짜뉴스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 2) 정치 진영의 유불리에 따라 이뤄지는 정치 권력의 가짜뉴스 대응

가짜뉴스는 정치, 경제, 사회, 과학, 문화 등 폭넓은 분야에서 존재할 수 있지만, 언론 보도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정치 영역의 가짜뉴스에 집중된다. 이는 가짜뉴스 담론이 정치적 담론 투쟁의 성격을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정치 뉴스의 주요 정보원인 정치권이 어떻게 가짜뉴스에 접근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 사회의 가짜뉴스 담론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필수적 요소이다.

언론 보도에 나타난 가짜뉴스 담론을 살펴보면 가짜뉴스에 대한 각 정치 진영의 입장은 ‘진실 추구’, ‘표현의 자유’처럼 가치 추구적 성격보다 각 정파의 유불리에 따라 가짜뉴스 문제나 해당 이슈에 대한 입장을 판단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우선 정치 뉴스에서 가짜뉴스를 규정하고 공세를 취하는 담론 주체는 주로 현재 집권한 정치 진영이나 정부 기관이다. 야당이 여당이나 정부 측에 어떤 의혹을 제기하면 정부나 여당은 반박에 앞서 의혹 자체를 가짜뉴스로 규정한다. 또한 정부와 여당은 지속적으로 사정 기관에 가짜뉴스 단속을 주문한다. 이에 대해 보수 야당은 정부와 여당의 가짜뉴스 낙인에 반발하고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며 정부 단속의 부당함을 주장한다. 하지만 보수 야당이 실제로 표현의 자유나 해석 담론의 차이 인정 등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일례로 한 야당 대표는 한 방송사의 보도를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취재 거부, 법적 대응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바 있다.

2018년 언론 보도를 살펴보면 여당과 정부 기관 등은 가짜뉴스의 심각성을 제기하며 지속적으로 가짜뉴스 단속을 주문한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경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은 가짜뉴스를 집중 단속한다. 동아일보의 “가짜뉴스 등 선거범죄 무관용 원칙 구속수사” 기사에 따르면 경찰이(배준우, 2018, 1, 16), “법무-행안장관 “가짜뉴스엔 무관용 처벌”” 기사에 따르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가짜뉴스를 엄단하겠다고 경고했다(허동준, 2018, 6, 1). 동아일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를 인용해 온라인 공간에서 6.13지방선거와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가 6월 3일 기준으로 3383건이 적발되었고, 이는 2014년 6.4 지방선거의 허위사실 공표 939건의 3.6배라고 보도한다(황성호, 2018, 6, 7).

정부 및 여당의 가짜뉴스에 이러한 강경 대응은 경향신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경향신문의 “민주당 가짜뉴스 449건 고소, 고발”(김한술, 2018, 3, 5), “이 총리 “가짜뉴스 더는 묵과 못해””(김재중, 2018, 10, 2), “김태년 “가짜뉴스는 사회적 독극물, 사회악””(김한술, 2018, 10,

16) 등의 기사를 보면 정부 여당은 가짜뉴스를 선악적 이분법으로 접근하며 법적 대응을 천명하고 있다. 경향신문의 인터뷰 기사에서 김대년 선관위 사무총장은 지역 여론을 왜곡하는 가짜뉴스 등을 선관위가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이지선, 2018, 1, 17). “경찰, 6·13 지방선거 관련 가짜뉴스·해킹 집중 단속”(선명수, 2018, 1, 28), “가짜뉴스 중간유포자도 처벌”(유설희, 2018, 4, 13) 기사에서는 경찰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의 각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을 열고 가짜뉴스 등을 24시간 단속한다고 전한다.

정부와 여당의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은 공정선거 관리라는 명분에만 머물지 않았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낙연 총리는 자신의 베트남 방문 시 작성했던 방명록 내용이 김일성 주석에 대한 찬양으로 왜곡되어 퍼져 나갔으며 가짜뉴스를 강력히 성토한다. 이후 이낙연 총리 주도로 정부 기관의 적극적인 가짜뉴스 단속령이 떨어진다(김지혜, 2018, 9, 28). 이낙연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검찰, 경찰,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가짜뉴스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촉구하며 가짜뉴스와 전쟁을 선포한다(김재중, 2018, 10, 2). 동아일보의 “중대 가짜뉴스, 고소고발 없어도 수사” 기사에 따르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허위조작정보를 고소 및 고발 전이라도 적극 수사하라고 지시했다(허동준, 2018, 10, 17).

법무부는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등 주요 처벌 사례 15건을 예시로 들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방북 중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허위 사실을 2014년 4~11월 동영상으로 유포해 징역 1년 6개월형이 확정된 판결이 맨 위에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버지가 북한 인민군’이라는 허위 사실을 2016~2017년 유포해 징역 10개월형이 선고된 사건도 포함됐다. 이 밖에 △유명 스포츠 스타가 애국가 영상에 자신의 경기장면을 넣어 달라고 로비했다는 주장 △세월호 침몰사고 구조 담당자들이 시신 수습을 못 하게 한다는 명예훼손 사건 △방송인에 대한 출처 불명의 허위 폭로 글 등도 처벌 사례에 들어갔다. (허동준, 2018, 10, 17, <동아일보>)

그런데 아래 제시한 동아일보의 “가짜뉴스 수사-내사 56%가 ‘문재인 대통령 비방글’” 기사에 따르면 경찰이 한 달 동안 단속한 가짜뉴스 37건 가운데 국민의 삶과 밀접한 사안은 3건에 불과하다. 수사 및 내사 중인 가짜뉴스 대부분은 정부 및 여당과 대립하는 정치 진영에서 나온 내용 위주였다(조동주, 2018, 10, 12).

경찰이 수사 또는 내사 중인 16건 가운데는 ‘○○군에서 성범죄가 많이 일어난다’는 글 1건 외에

는 모두 문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북한 관련 글이었다. 문 대통령을 허위 비방한 글은 9건으로 문 대통령이 8월 여성 비서관들과 함께 집무실에서 찍은 사진을 두고 '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무실 사진을 모방해 연출 사진을 찍었다고 페이스북에 적은 글이 대표적 사례다. 북한에 대해 근거 없이 적대적인 취지로 온라인에 쓴 글이나 유튜브 콘텐츠 역시 주된 내사 및 수사 대상이었다. "남북관통 철도사업과 고속도로는 기습 남침을 도우려는 것", "정사회담 대가로 북한에 85조 원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루머를 사실인 것처럼 전파했다는 것이다. 경찰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삭제·차단을 요청한 글 21건 가운데에도 '난민이 8세 여아를 성폭행했다', '중장년층 정년퇴직이 5년 앞당겨졌다'는 등 2건만 국민 생활과 관련이 있었다. (조동주, 2018, 10, 12, <동아일보>)

한편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인사들 역시 가짜뉴스에 관한 입장과 대응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이뤄졌다. 자유한국당은 2018년 하반기 국감을 통해 정부의 가짜뉴스 단속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고 강하게 항의한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가짜뉴스 대책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보수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비판한다(노도현, 2018, 10, 11; 허남설, 2018, 10, 10).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대표와 MBN의 갈등 사례처럼 자신들과 관련된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와 경쟁 담론의 형성을 허용하기보다 엄격한 법적 대응을 선택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류여해 최고 위원을 처음 알게 된 것은 2017년 4월 대선 때부터라고 한다. 그래서 홍 대표와 자유한국당은 2018년 2월에 '수년간 성희롱' 했다는 MBN의 보도가 명확한 가짜뉴스라고 주장하며,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으로 MBN 한국당 출입 금지(강병한, 2018, 2, 2), MBN 담당 기자와 보도 국장을 상대로 5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강경 대응을 한다(허남설, 2018, 2, 7). 이 사건에 관해 경향신문은 방송 기자연합회 성명서를 인용해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라고 해서 기자를 현장에서 퇴장시키고, MBN 부스를 빼는 등의 행위는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처사", "문제가 된 기사는 표현에 일부 하자가 있었을 뿐 이를 '가짜뉴스'로 규정한 것은 과도한 논리의 오류"라며 홍 대표의 대응을 비판했다(박순봉, 2018, 2, 2). 또한 경향신문은 홍 대표의 강경 대응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MBN만 집중 겨냥해 전체 언론 길들이기를 시도라는 해석을 한다(허남설, 2018, 2, 4).

이처럼 정치 진영의 가짜뉴스 대응 방식은 진실이나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를 기준으로 접근하기보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진보 정치 진영이라고 내세우는 여당 진영의 인사들과 그들이 주도하는 행정부는 공권력을 통해 가짜뉴스를 적극 단속

하려는 태도를 보이며 진보 정치 진영이 추구해왔던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를 스스로 붕괴시킨다. 실제 가짜뉴스 단속 사례의 성격이나 이슈를 보면 사적 영역의 보호나 국민의 삶과 밀접한 사안 이 아니다.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다양한 담론 형성과 경쟁을 보장해야 할 정치 영역에서 가짜뉴스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보수 야당 역시 정부의 가짜뉴스 대책을 보수 언론에 재갈을 물린다거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이유로 반발하지만, 이는 정치 담론 경쟁의 유불리와 관련된 판단에 불과하며 진정한 표현의 자유를 추구하는 것과는 동떨어져 보인다.

### 3) 정치 권력과 사회적 맥락 속에 달라지는 언론사의 가짜뉴스 담론

언론사들의 가짜뉴스에 대한 태도는 사안이나 시기별로 미묘한 차이가 나타난다. MBC 뉴스는 가짜뉴스가 피해자에게 상처를 준다는 점을 근거로 가짜뉴스를 일관되게 비판한다. 동아일보는 2018년 상반기까지 가짜뉴스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중심이었지만 하반기에는 가짜뉴스 비판 담론이 집권 세력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경계하는 태도를 보인다. 경향신문은 이념적 가치에 따라 가짜뉴스를 판단한다. 경향신문은 칼럼 등을 통해 가짜뉴스 담론이 초래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위축을 경계하지만, 예멘 난민 이슈에서 난민을 비하하는 가짜뉴스에 관해서는 비판적인 태도를 드러낸다. SBS 뉴스는 가짜뉴스 문제를 많이 다루지 않았고 기사 건수도 비교 대상 언론사 가운데 가장 적다. 하지만 SBS 뉴스는 가짜뉴스가 공론 과정을 어떻게 왜곡하는지 사례를 통해 비판하면서도 한편으로 가짜뉴스 법적 규제가 가진 문제점 역시 제기했다.

#### (1) 언론사의 정치 성향에 따른 가짜뉴스의 담론 차이

2018년 가짜뉴스에 관한 언론 보도를 살펴보면 언론사들은 가짜뉴스 담론에서 정파적 태도를 드러낸다. MBC 뉴스와 동아일보는 특정 정파의 유불리에 따라 가짜뉴스에 접근한다. 그런데 비슷한 정치 진영이라도 MBC 뉴스와 경향신문의 가짜뉴스 담론은 차이가 있다. MBC 뉴스는 정치 진영적 성향을 띠며 가짜뉴스에 관한 부정적 담론을 지속적으로 환기한다. 그러나 경향신문은 소수자 보호, 표현의 자유라는 이념적 가치를 준거로 가짜뉴스 문제에 접근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MBC 뉴스가 가짜뉴스 사례로 제시한 내용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정신이 이상하다’,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은 정상이 아니다’(오현석, 2018, 10, 1)처럼 주로 특정 정치 성향 사람들 사이에 떠도는 담론에 가까웠다. 그리고 온라인 공간에서 문재인 대통령 뇌출혈설, 제주 예멘 난민 138만원 지원설 등의 가짜뉴스가 급속하게 퍼졌다고 비판하며 가짜뉴스의 문제점을 진단한다(박영희, 2018, 7, 2). 또한 보수 성향의 노인들이 동영상 채널, SNS 뉴스 등을 적극 시청하며 가짜뉴스를 맹신한다는 한국일보 기사를 전달하고(MBC 뉴스, 2018, 6,

15),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의 유튜브 채널 'V 홍킴콜라'가 대부분 검증이 안 된 음모론으로 가득하다고 비판했다(서혜연, 2018, 12, 19). 이처럼 MBC는 가짜뉴스의 사례 선택과 비판에서 특정 정치 진영의 입장을 명확히 드러냈지만, 상대 정파의 시선에서 비판할 수 있는 가짜뉴스 사례는 다루지 않았다.

경향신문은 예멘 난민에 관한 가짜뉴스를 동성애와 마찬가지로 혐오성 가짜뉴스로 규정하며 다른 언론사와 달리 지속적으로 비판한다. 경향신문은 예멘 난민 이슈를 다룬 기사에서 난민 범죄 증가 우려나 난민들이 일자리를 가져간다는 뉴스를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사람들의 불안감 때문에 이런 뉴스가 확산되었다고 주장한다(서의동, 2018, 7, 4). 경향신문의 “언론·정치인의 ‘선부른 입’ ‘난민 가짜뉴스’ 무한 확산” 기사에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확산된 담론이 근거가 부족한 가짜뉴스라고 지적한다. 가령, 한 예멘 난민이 아랍 방송 ‘알자지라’ 인터뷰에서 “예멘이 평화로워지면 가족들이 있는 고향에 가고 싶다”고 말했을 뿐인데 어떤 누리꾼이 번역한 카드뉴스에서는 해당 발언이 “이런 섬에 갇혀 있느니 예멘으로 돌아가고 싶다”로 왜곡되었고, 일부 언론 보도와 함께 확산되었다는 것이다. 그와 함께 무슬림에 관한 신빙성이 떨어지는 게시물 등을 제시하며 이런 뉴스들이 결국 난민 혐오를 부추긴다고 비판한다(이유진, 2018, 7, 11). 경향신문은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의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가운데 “특정 국가·민족·종교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폄하하거나 편견과 선입견을 고착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를 인용하며 난민 관련 가짜뉴스에 담긴 편견과 혐오 등을 지적한다(선명수, 2018, 8, 7). 경향신문 정책사회부장은 예멘 엑소더스 배정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공격인데, 그 무기가 우리나라 등이 석유를 구입하며 지불한 돈으로 이뤄졌으며 예멘 난민 문제가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친다. 그러면서 레바논이 난민을 받아들이는 바람에 이슬람 국가가 되었다는 가짜뉴스와 이슬람 공포증에 근거한 인종차별적 혐오를 강하게 비판한다(구정은, 2018, 9, 4). 서울대 이준웅 교수는 “인터넷 여론 조작과 발언의 자유”라는 경향신문 칼럼에서 난민과 동성애 사안에 관한 가짜뉴스는 진실이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해당 그룹에 관한 증오는 남는다며 해당 가짜뉴스의 문제점을 지적한다(이준웅, 2018, 9, 30).

한편 동아일보는 가짜뉴스와 관련된 소재 선택에서 정파적 이해관계를 드러냈다. 동아일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배우 김부선 씨의 스캔들 의혹 관련 뉴스를 이 연구의 동아일보 가짜뉴스 담론 분석대상 140건 가운데 16건이나 될 정도로 적극적인 보도를 했다. 이재명 스캔들 의혹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과거에 배우 김부선 씨와 밀애를 나누었다는 이야기로 김부선 씨가 주장하고 선거 기간에 불거졌다.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TV토론에서 이재명 후보의 ‘여배우 스캔들’ 의혹을 꺼내자 이 후보는 옛날에 그 배우를 만난 적 있지만



해당 스캔들은 본인과 무관하다고 일축했다(최정아, 2018, 5, 30). 그리고 '이재명캠프 가짜뉴스대책단'은 밀에 의혹을 부인하며, 의혹을 제기했던 김영환 경기도지사 후보, 배우 김부선 씨를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했다(최정아, 2018, 6, 26). 이후에 진실이 무엇인지를 두고서 공방이 오랫동안 이어졌고, 동아일보는 공지영, 김어준, 강용석 등 이슈 관계자가 해당 발언을 하거나 김부선 씨가 페이스북으로 심경을 올릴 때 기사로 실으며 이슈를 지속적으로 부각했다.

동아일보는 또한 시기에 따라 가짜뉴스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가짜뉴스에 관한 옹호라는 이중 잣대를 드러낸다. 물론 동아일보의 기사들을 보면 가짜뉴스에 관한 비판적 태도가 전반적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동아일보는 2018년 하반기에 가짜뉴스에 대해서 사안에 따라 엇갈린 태도를 보인다. 동아일보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가짜뉴스 담론의 대상일 경우 가짜뉴스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정부 및 여당의 가짜뉴스 대책과 관련해서는 부작용,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며 비판적 태도를 보인다. 동아일보는 "사실 확인도 전에 "여혐 폭행" 낙안... 가짜뉴스 불지른 靑청원" 기사에서 이수역 폭행 사건을 사례로 들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가짜뉴스'의 유통 창구가 된다고 비판한다(이지훈, 2018, 11, 17). 동아일보는 또한 청와대 국민청원의 "靑국민청원 절반이 '고발-처벌요구'... 그중 14%는 팩트 오류" 기사에서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왜곡된 정보가 유통되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10만 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 99건을 확인한 결과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 51건 가운데 7건이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다고 말한다.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경우에도 피의자 김성수가 스스로 심신 미약을 주장하지 않았음에도 온라인을 통해 김성수가 심신 미약으로 참작을 받으려 한다는 이야기가 퍼져갔다. 그리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119만 명이 심신미약 참작을 반대하는데 동의했다. 이런 점을 근거로 동아일보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가짜뉴스 확인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윤다빈, 2018, 11, 20).

하지만 동아일보는 2018년 하반기에 정부의 가짜뉴스 대책이 자칫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장원재, 2018, 10, 9). 동아일보는 여당 측 자문 교수가 '현재 형법·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음에도'라고 말하거나 진보적 시민 단체가 '정부의 개입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우려'라고 말한 점을 인용하며 학계와 시민 단체의 의견을 빌려 여당의 가짜뉴스 대응책에 문제를 제기한다(장원재, 2018, 10, 24). 동아일보의 한 논설위원 칼럼에서는 정부의 가짜뉴스 엄정 대처가 과거 정권에서 시도되었던 '유언비어 엄단'의 신종 패러디처럼 보인다고 주장하며 권력에 반하는 발언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라고 의심한다(고미석, 2018, 10, 24). 동아일보의 해외 특파원 칼럼에서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가짜뉴스 현상을 진단하고 비판하면서도 말미에는 "'가짜뉴스를 뿌리 뽑겠다'는 구실을 내세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부에 대한 견제나 비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얘기가. 가짜뉴스도 문제지만 이를 권력의 입맛에 맞

게 활용하려는 아프리카 정부들의 태도가 더 큰 문제다.”라는 내용을 덧붙인다(서동일, 2018, 11, 19). 동아일보의 “군사합의 비판은 가짜뉴스”라는 軍의 비뚤어진 언론권 사설에서는 국방부가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 내용의 문제점을 비판한 기사들을 모아 ‘FAKE’로 빨간 낙인을 찍었다며 국방부의 태도를 강하게 성토했다(동아일보, 2018, 12, 20).

SBS는 주로 단편적 사실 위주로 가짜뉴스에 관한 내용을 소개한다. 가짜뉴스의 문제점을 지적한 기사도 있었지만(권지윤, 2018, 10, 2; 배재학, 2018, 1, 3), 정치적 쟁점이 발생할 때 간략하게 사건의 내용을 소개하는 식이다. 가령, 홍준표 대표가 홍 대표의 성희롱 의혹을 보도한 MBN 측에 강경 대응을 하고, 자유한국당이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언할 때 SBS 뉴스는 자유한국당과 MBN 측의 상반된 주장을 나열하고, 감정적 대응, 비판 보도 위축 의도라는 해석이 정치권에서 나온다는 정도로만 간략히 평가한다(권란, 2018, 2, 2). 이는 경향신문의 이 사안에 관한 집중 보도와 차이를 보인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스캔들 의혹 역시 SBS는 비중 있게 다루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련된 뉴스 내용도 상반된 주장을 균형적으로 서술한다(김기태, 2018, 6, 26). 이는 이 사안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던 동아일보의 보도 방향과 차이를 드러낸다.

SBS 뉴스는 그 외 심재철 의원의 청와대 업무 추진비 폭로에 관해서도 세부 쟁점을 기밀 vs. 국민 알권리, 시스템 오류 vs. 불법 알았을 것, 의정활동 vs. 가짜뉴스로 나누어 다른 시각을 균형적으로 소개했다. 그런데 정치적 가짜뉴스 논란에 소극적으로 보도하던 SBS 뉴스는 정부의 가짜뉴스 대책에 관해서 비판적 태도를 보인다. 가령 SBS는 이 문제를 “가짜뉴스 엄단” 법무부 발표에...“과거 정부와 뭐가 다른가”(임찬중, 2018, 10, 16), “가짜뉴스 적극 수사” 발표 논란...과거 사례 보면 ‘우려’(임찬중, 2018, 10, 17), “정부의 ‘가짜뉴스 전쟁’ 실효성 있나?... 논란 계속”(장훈경, 2018, 10, 21), “가짜뉴스 사라질 수 있을까?...규제안 따져보니”(박세용, 2018, 10, 21) 뉴스에서 비교적 집중적으로 다루며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를 집중 제기한다. 또한 SBS 뉴스는 이러한 가짜뉴스 대책이 과거 보수 정부에서 시도되었던 규제와 뭐가 다르냐며 비판한다.

이처럼 가짜뉴스에 관한 각 언론사의 담론을 살펴보면 해당 언론사의 정파성과 정치 권력의 이해관계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동아일보는 2018년 전반에 가짜뉴스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지만, 하반기에는 비판 횟수가 적어지고 오히려 가짜뉴스 단속을 경계하는 칼럼을 보낸다. 가짜뉴스 담론에 관한 MBC 뉴스와 동아일보의 태도는 언론이 정치 권력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느냐에 따라 내용이나 태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경향신문은 언론사의 가치관을 기준으로 가짜뉴스 담론에 접근한다. 경향신문은 예멘 난민 등 소수자와 관련된 가짜뉴스에 적극적으로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다. 하지만 경향신문은 사실과 외부 칼럼

등을 통해 가짜뉴스 단속에 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준거로 내세우며 수사 기관의 처벌보다 자율 규제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다. MBC 뉴스와 동아일보가 가치 추구적인 태도보다 정파적 이해관계를 대변했다면, 경향신문은 정파적 이해관계보다 정치 진영이 다루어왔던 정치 담론, 즉 소수자 보호나 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 정치성을 드러냈다는 점이 차이라고 볼 수 있다. SBS는 가짜뉴스와 관련된 보도에서 비교적 중립적 태도를 유지하려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2018년 하반기의 가짜뉴스와 관련된 정부의 규제책에 관해서는 적극적인 비판 태도를 보인다.

## (2) 신문은 SNS를, 방송은 유튜브를 가짜뉴스 유통 경로로 비판

2018년 가짜뉴스에 관한 언론 보도를 살펴보면 일부 매체 갈등적 성격이 드러나기도 했다. 신문 영역인 동아일보와 경향신문은 SNS나 포털 뉴스에서 생산되고 유통되는 가짜뉴스를, 방송 영역인 MBC 뉴스는 보수 성향의 유튜브 채널이 가짜뉴스를 생산한다며 적극 비판한다. SBS 뉴스는 가짜뉴스에 관한 기사 건수가 적었을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유튜브 비판 내용이 잘 드러나지 않았다.

경향신문은 가짜뉴스가 생성되고 확산되는 주요 통로로 SNS를 지목한다. 경향신문은 한 기사에서 가짜뉴스가 빠르게 확산할 수 있는 이유로 SNS 보급을 말하고 있다(김태훈, 2018, 10, 13).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도 “전통적 매체는 여전히 중요”라는 경향신문 칼럼에서 가짜뉴스의 유통 경로로 SNS를 언급한다(김서중, 2018, 2, 4). 경향신문은 페이스북이 스리랑카 등 6개국에서 언론이 제공하는 뉴스와 그렇지 않은 뉴스를 분리하는 실험을 한 후 가짜뉴스와 거짓 정보가 페이스북 플랫폼에서 더 늘어났다는 내용을 뉴욕타임스 보도를 인용해 말한다(주영재, 2018, 3, 2). 또 경향신문은 뉴욕 타임스의 칼럼니스트 파하드 만주가 2개월 동안 소셜 미디어 대신 신문과 주간지 등 종이로만 뉴스를 보았더니 잘못된 정보를 접할 일이 없었고, 해당 기간에 있었던 특정 사건을 정확히 알 수 있었다고 한다(남지원, 2018, 3, 16).

경향신문의 “SNS 피로도 왔나” 기사에서는 소셜 미디어 가입률과 이용 시간이 감소한 이유로 가짜뉴스 등 콘텐츠 신뢰도 등의 문제 때문에 이용자들이 피로감과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서술한다(주영재, 2018, 6, 25). 물론 경향신문은 가짜뉴스를 접하는 경로로 유튜브 등을 거론하기도 한다(이보라, 2018, 11, 23). 하지만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확산하는 주요 통로로 SNS를 말하고 있으며, 그 대척점으로 정보를 걸러내는 종이 신문의 장점을 부각한다. 그런데 이 담론을 보면 경향신문은 기성 언론의 오보 등을 제대로 지적하지 않는다. 가짜뉴스의 생산과 유통을 오직 온라인 이용자에게만 책임을 지우고 있다.

동아일보는 가짜뉴스의 온상지를 인터넷 공간, 특히 SNS와 포털뉴스 댓글을 지목한다. 동아

일보의 한 기자는 페이스북이 가짜뉴스의 온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박용, 2018, 4, 23). 또 다른 동아일보 기사에서는 카카오, 포털 뉴스 등에서 가짜뉴스가 유통되고 있다고 말한다(신무경, 2018, 5, 17). “SNS에 지쳐가는 사람들” 기사에서는 SNS 이용 시간이 감소한 이유 중 하나로 가짜뉴스 등의 범람을 언급한다(김성규, 2018, 6, 26). 한 논설위원의 칼럼에서는 SNS가 자극적인 가짜뉴스들의 확산 통로가 되고, SNS 기업들이 이를 방치해서 SNS 이용자들이 증가했다고 주장한다(우경임, 2018, 7, 31). 최재원 다음 소프트 이사의 “트위터 이어 페이스북에도 ‘싫어요’ 늘어”라는 동아일보 칼럼에서도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신뢰도가 부족하다고 주장한다(최재원, 2018, 8, 10). 이처럼 동아일보는 SNS와 관련된 기사 속에서 SNS가 가짜뉴스의 온상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드러낸다. 동아일보는 포털 뉴스 댓글란 역시 가짜뉴스의 생산과 유통 공간으로 지목한다. 동아일보의 “포털의 ‘댓글 개미지옥’에 병드는 대한민국” 사설에서는 민주당 신경민 의원의 말을 빌려 포털뉴스 댓글이 “가짜뉴스가 순식간에 확산되는 효과적 경로”라고 말한다(동아일보, 2018, 3, 23). 또한 동아일보는 네이버가 댓글 관리를 허술하게 해서 댓글 부대의 장이 되었다고 비판한다(박용, 2018, 4, 23). 동아일보는 포털 뉴스가 편향적인 배치로 단식 농성을 하는 김성태 의원과 무관한 가짜뉴스를 방치했다고 비판한다(홍정수, 2018, 5, 7). 동아일보 기사는 경향신문과 마찬가지로 가짜뉴스의 유통 경로로 SNS를 지목하고, 덧붙여 포털 뉴스 댓글도 함께 다루는 것을 엿볼 수 있다.

MBC 뉴스는 가짜뉴스 유통 경로로 SNS를 비판하기도 하지만 다른 언론사보다 유튜브를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비판한다. 예를 들어 극우 성향 채널의 유튜브 방송이 성장하고 가짜뉴스가 늘어나서 자유한국당도 이런 현상에 문제 의식을 갖고 자체 콘텐츠 제작을 늘려 차별화를 시도한다는 내용을 보도한다(김준석, 2018, 9, 30). 또 보수 성향의 유튜브 채널 가운데 2개를 선택하고 ‘문재인 정신 이상설’, ‘거짓 국정 지지도’처럼 가짜뉴스로 볼 수 있는 장면을 편집해서 가짜뉴스로 제시한다(오현석, 2018, 10, 1). MBC 뉴스는 가짜뉴스의 주요 출처가 유튜브라는 점을 지목한다(이필희, 2018, 11, 23). 홍준표 대표가 ‘TV 홍카콜라’를 유튜브로 방송하기 시작했는데 유튜브 방송 내용이 가짜뉴스와 막말로 가득하다는 평가를 다른 정당의 정보원을 빌려 말하고 있다(서혜연, 2018, 12, 19). 이처럼 MBC 뉴스는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을 언급하며 이 채널들의 가짜뉴스를 비판한다.

신문 매체가 SNS 가짜뉴스를 주로 비판하고, 방송 매체가 유튜브 가짜뉴스를 비판하는 점은 매체의 특성과도 관련 있을 수 있다. 정일권(2010)은 국내 뉴스의 사회면 기사를 분석하며 방송 뉴스와 신문 뉴스의 차이를 설명한다. 방송사는 영상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채해 뉴스가 신문사보다 2.5배 높다. 반면 신문은 텍스트 가치가 높기 때문에 법조 기사 비중이 방송보다 2.5배

높게 나타난다고 말한다. 그래서 신문과 방송이 주로 비판하는 가짜뉴스 매체가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텍스트를 중심으로 바라보는 신문 매체와 영상을 주목하며 바라보는 방송 매체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 4) 가짜뉴스 공격이 외면하는 가짜뉴스 사례의 속성

2018년 언론 보도에서 이슈가 되었던 가짜뉴스 공방을 보면 해당 사례에 허위 가능성이 분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례를 가짜뉴스로 규정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 드는 경우가 있다. 공적 사안에 관한 의혹 제기를 방어적 입장에서 일단 가짜뉴스로 규정하는 것은 아닌지, 해당 담론의 맥락보다 부분적 사실 오류를 쟁점으로 만들어 가짜뉴스 시비로 만드는 것은 아닌지, 진위를 판단하기 어려운 해석 영역의 담론을 가짜로 규정한다든지, 추정과 논리적 비약이 심한 온라인 담론의 속성을 간과한 채 허위성을 부각하는 담론적 특징이 그러한 경우이다. 특정 입장에서 가짜뉴스라고 주장하는 사례가 어떤 점에서 가짜뉴스 낙인에 모호한 점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공적 사안에 관한 의혹 제기를 가짜뉴스로 규정

정치 영역이나 공공 영역에서 어떤 의혹이 제기되면 당사자들은 일단 그 의혹을 가짜뉴스로 낙인찍고 의혹 제기자를 가짜뉴스 생산자로 몰아간다. 한 국회의원이 청와대의 업무 추진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 공적 영역이기 때문에 해당 상황을 잘 이해하는 담당자가 해명이나 반론을 하면 된다. 하지만 가짜뉴스 담론에서는 의혹 제기 자체를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 검토 등 강경하게 대응(정환보, 2018, 9, 28)하는 문제점이 있다. 공적 영역에서 의혹 제기가 있을 때 바람직한 대응은 가짜뉴스로 낙인찍기보다 상반된 담론 제시와 경쟁을 통해 무엇이 사실이고, 더 타당하다는 점을 설득하는 것일 수도 있다.

물론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자녀 의혹처럼 의혹 제기 자체가 명백하게 가짜뉴스로 드러난 경우도 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측은 시험 부정으로 구속된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의 교사 A 씨가 김상곤 전 부총리의 세 딸 중 두 딸의 담임이었고, 명문대 치대에 합격한 딸의 학생부종합전형 결과에 의문이 생긴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가짜뉴스는 김 전 부총리의 두 딸이 숙명여고에 재학한 사실을 연결 고리로 의혹이 부풀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A 씨는 김 전 부총리의 두 딸 담임을 맡은 바가 없으며, 두 딸 역시 치대가 아니라 해외 대학, 어느 사립대 법대에 진학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의혹을 제기했던 자유한국당 인사들은 가짜뉴스였음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를 했다(김소정, 2018, 11, 16; 홍정수, 2018, 11, 17). 제1

야당은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의혹을 제기했고, 사실이 확인되자 가짜뉴스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공적 영역에서는 특정 단서를 바탕으로 누구나 의혹을 제기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공공 기관이나 담당자는 의혹 제기를 가짜뉴스로 낙인찍으며 주장을 억압하기보다 해명 등을 통해 경쟁 담론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가짜뉴스 담론에서는 해당 기관이 일방적 해명만 제시한 후 상대 주장을 가짜뉴스로 낙인찍는다. 아래 제시한 기사를 살펴보면 2018년 10월 서울교통공사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을 제기한다. 공사의 무기계약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공사 직원들의 친인척에 대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 제기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 7월에 정규직 전환을 발표했는데, 그 전에 미리 그것을 알고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하는 것이 일정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3월 실시한 ‘친·인척 재직 현황 조사’ 등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고용 특혜로 인해 청년 일자리가 줄었다고 비판했다. (중략) 여당 의원들은 서울교통공사 의혹과 관련해 ‘가짜뉴스’가 나오고 있다며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서울교통공사를 둘러싼 의혹이 사실인지 팩트체크 하겠다”면서 “한 일간지가 제기한 교통공사 민주노총 소속 전 노조위원장 아들의 특혜입사와 관련해 정정보도가 나왔다” (이명희·이진주 2018, 10, 22, <경향신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의 출발점이었던 정규직 전환자 중 사내 친인척이 있는 직원 수가 당초 108명에서 112명으로 4명 늘었다. 서울시는 공사 1·3·4급 직원의 배우자, 자녀 등 4명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 4명은 공채와 제한경쟁 입사자로서 채용비리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중략) 윤 부시장은 또 기자회견에서 “공사의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친인척에 대한 특혜는 없었다”며 “일정상 정규직 전환이 될 것을 미리 알고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하는 건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공사의 정규직 전환 방침을 공식 발표한 것은 지난해 7월이고,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은 이보다 먼저 입사했으므로 전환 방침을 미리 알고 지원한다는 것은 불가능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공사의 상당수 직원들은 “정규직 전환 얘기는 2012년부터 나왔고 주변 사람에게 정규직 전환을 기대하고 무기계약직 입사를 권유하는 게 드문 일이 아니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한우신, 2018, 10, 25, <동아일보>)

이 사안에 관한 언론 보도를 보면 경향신문은 야당과 여당의 양쪽 주장을 나란히 소개한다.

동아일보 역시 야당 의원들의 의혹 제기에 관한 서울시 측의 해명을 다루고 있다. 그런데 동아일보는 경향신문과 달리 추가 정보원 진술을 통해 공사 직원의 주변 사람들이 정규직 전환을 기대하며 무기계약직에 먼저 입사를 시도했다고 보도한다. 동아일보는 서울시 부시장의 해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며 의혹 제기를 가짜뉴스로 수용하기보다 이처럼 서울시와 공사 측의 해명에 다시 의문을 제기한다.

## (2) 부분적 사실 오류 vs. 맥락적 담론

담론이나 이슈에서 그것의 맥락보다 부분적 사실에만 매몰되면 쟁점도 달라지면서 담론의 중심과 다른 방향에서 팩트 논쟁에 빠져들 수 있다. 이 경우 공론장에서 이슈 제기와 그것에 관한 담론적 반박보다는 각자에게 유불리한 특정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배제하는 방식으로 쟁점을 만들고 상대 주장을 가짜뉴스로 몰아갈 수 있다.

아래 사례를 보면 방송인 김미화 씨는 이언주 의원이 제기한 '남북철도추진위원장설'을 가짜뉴스라고 규정한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실제 국토교통부 산하에 '남북철도추진위원회'라는 기구는 존재하지 않으며, 김미화 씨는 한 시민단체가 주도한 '동해북부선 연결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다(장연제, 2018, 12, 13). 이 경우 부분적 사실과 담론의 맥락 중 무엇을 중심으로 보느냐에 따라 가짜뉴스 여부가 결정된다. 이언주 의원의 문제 제기 속에 담긴 김미화 씨의 정확한 소속과 명칭은 사실과 다르다. 게다가 김미화 씨가 화이트리스트로 정부 요직을 맡았다고 이 의원이 주장한다면 가짜뉴스이다. 하지만 맥락적으로 살펴보면 방송인 김미화 씨가 '동해북부선 연결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남북철도 연결을 앞장서 추진한다는 사실이 틀리지는 않았다. 김미화 씨의 직책명만 보아서는 이 활동이 정부 활동인지 민간 활동인지 표면적으로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또한 이 의원의 문제 제기 맥락은 문제인 정부와 관련된 인물들이 화이트리스트로 요직을 맡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김미화 남북철도추진위원장'을 언급했기 때문에 부분적 사실 오류가 강조되면 정작 담론의 맥락에서 벗어난 쟁점이 새로이 발생할 수 있다.

앞서 이 의원은 문제인 정부에 화이트리스트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김미화와 방송인 김제동 등을 지목해 논란이 됐다. 그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정부를 비난하면서 당시의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를 문제 삼아 수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보냈던 문제인 정부에서 과연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가 없어졌느냐"며 "김제동 7억 연봉 공영방송 시사프로 진행자, 김미화 남북철도추진위원장, 문팬 카페지기 공기업 사외이사. 이들이야말로 화이트리스트가 아

니냐”라고 주장했다. (장연제, 2018, 12, 13, <동아일보>)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제기한 ‘남북철도추진위원장설’에 대해 방송인 김미화가 가짜뉴스라며 사과를 요구하자 이 의원은 “저도 팩트가 궁금하다”며 반박했다. 이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가짜뉴스 퍼트렸다고, 팩트를 체크하겠다고 한다. 하시라. 남북철도추진위원장. 김미화가 그 직을 맡았던 당시 언론 등에서 그렇게 지칭해서 저도 그리 지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략)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남북철도추진위원회’라는 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김미화는 올해 초 시민단체 ‘희망래(來)일’이 주도해 출범한 ‘동해북부선 연결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희망래일’ 2010년 남북철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려고 만들어진 시민단체다. (윤우열, 2018, 12, 13, <동아일보>)

이재명 경기도지사 스캔들 의혹은 그가 과거에 한 배우와 밀회를 했다는 주장과 그것에 관한 이재명 지사 측의 반박이 이어지며 형사 사건으로 비화되었다. 이 사안은 공공 사안도 아니고 성폭력도 아니었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력 후보자 스캔들로 부각되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은 ‘가짜뉴스대책단’이라는 명칭으로 대응단을 만들고 처음부터 상대 주장을 모두 가짜뉴스로 몰아간다. 이에 대해 해당 배우와 폭로에 관계된 인물들은 이 지사 측 주장을 반박하며 공방을 벌인다.

이 당선자 측 가짜뉴스대책단은 이날 경기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후보는 2009년 5월 22일부터 24일 사이 비가 온 날 김 씨와 이 당선자가 서울 성동구 옥수동 김 씨 집에서 밀회를 가졌다고 했다”며 “하지만 5월 23일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이 있던 29일까지 서울에서 비가 온 날은 23일뿐이었는데 김 씨는 그날과 24일 제주 우도에 있었다. 따라서 명백한 거짓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당선자는 23일 서거 당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조문을 갔고 24~29일에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분향소를 지켰다”고 말했다. 대책단은 2009년 5월 23, 24일 우도에서 찍은 김 씨 사진이 담긴 개인 블로그 캡처 사진을 증거로 공개했다. (최정아, 2018, 6, 27, <동아일보>)

그는(김부선) “나는 2009년 5월 ‘22일~24일’이라고 날짜를 특정한 적 없다. 비가 엄청 오는 날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뵈러 봉하에 가는 길이라 했다”며 “이날 나는 봉하로 향했고 성남을 지나 가며 분명히 이재명과 해당 내용의 통화를 했다. 그리고 봉하에 내려가 기자도 만났고 숙소를



못 잡아 차 안에서 1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과거 날짜를 헛갈렸던 적은 있었으나 이후 날짜를 특정한 적은 없었다”며 “날짜를 헛갈렸다고 있었던 사실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이게 팩트다”고 밝혔다. (최인진, 2018, 6, 26, <경향신문>)

위에 제시한 기사를 보면 양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재명 지사 측은 구체적인 날짜와 양 당사자의 알리바이를 제시하며 해당 날짜에 이 지사의 스캔들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즉 이재명 지사 측은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봉하마을 조문, 성남 분향소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만남이 불가능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배우 김부선 측은 날짜를 특정한 적 없고 비 오는 날 짜와 봉하 가는 길 등 당시 밀회의 맥락은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이 공방을 보면 이재명 지사 측은 특정 날짜를 부각하며 밀회설을 가짜뉴스로 주장하지만 배우 김부선 씨는 밀회와 관련한 맥락을 제시하며 밀회가 거짓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경향신문과 동아일보에 따르면 ‘이재명 가짜뉴스대책단’은 이 사건을 제기했던 김영환 경기지사 후보와 김부선 씨를 검찰에 고발했지만, 경찰은 수사 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의견’ 검찰 송치 결정을 했다(최인진, 2018, 11, 8; 최정아, 2018, 11, 8).

### (3) 다른 해석의 맥락을 부정한 가짜뉴스 낙인

특정 사안에 대한 입장이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갈등적 상황에서 소통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부분적 사실의 진위 여부 판단보다 양 측이 주장하는 담론의 해석이 더 필요한 경우가 있다. 하지만 첨예하게 입장이 갈릴수록 당사자들은 그런 접근보다 상반된 해석적 담론을 사실의 문제로 치환하고 상대 주장을 가짜뉴스로 낙인찍는다.

사립 유치원의 회계 문제를 두고서 일어나는 갈등은 관련자의 입장에 따라 상대 주장을 가짜뉴스로 규정한다. 우선, 박용진 의원 등은 교육청 감사 결과를 근거로 사립 유치원의 비리 행태를 폭로했다. 하지만 한국유치원 총연합회는 박용진 의원이 근거로 제시한 해당 감사 결과 가운데 상당수가 행정 착오 문제나 경미한 위반이었음을 주장하며 박용진 의원의 주장을 가짜뉴스로 규정한다(노도현, 2018, 10, 18). 한국 유치원 총연합회는 더 나아가 사유 재산을 출자한 사립 유치원의 출연금 회수는 시장 경제 원칙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한상우, 2018, 10, 18). 이에 대해 교육부는 사립 유치원이 세제 혜택을 받는 비영리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교육 목적 외에 학부모 부담금을 쓸 수 없으며, 한국유치원 총연합회의 주장이 가짜뉴스라고 주장한다(한수연, 2018, 11, 20). 즉 사립 유치원은 민간 자본을 출자한 기관이기 때문에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한유총의 시각과 반대로 관련법에 따라 교육 이외 사용할 수 없다

는 교육부 주장이 대립하고 각 주체는 상대 주장을 가짜뉴스라고 규정한다. 이 사안에 관해 SBS 뉴스는 박용진 의원의 폭로가 가짜뉴스이며 유치원 설립자의 출연금 회수는 비리가 아니라는 한국유치원 총연합회의 주장을 인용한다. 반면 MBC 뉴스는 교육부의 주장을 인용해 사립 유치원은 세제 혜택을 받는 비영리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한국유치원 총연합회의 주장이 가짜뉴스라고 전달한다.

한국 유치원 총연합회는 감사 결과의 96%는 경미한 위반이었는데도 전체를 비리 유치원으로 보는 것은 가짜뉴스이자 정치 선동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유치원 땅과 건물에 출자한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출연금을 회수하는 것은 위법이나 비리가 아닌 시장경제의 원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상우, 2018, 10, 18, <SBS 뉴스>)

한유총 비대위는 18일 “박용진의 비리유치원은 ‘가짜뉴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현재 명단이 공개된 원들은 감사결과가 이의제기 및 사법심사를 완전히 마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노출돼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매도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유총은 “적어도 비리라고 가치판단을 하려면 사법심사를 마쳐 처벌받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며 “단순 행정착오는 비리로 매도할 것이 아니라 사립유치원에 맞는 제도를 통해 지도·계도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노도현, 2018, 10, 18, <경향신문>)

사립유치원은 개인사업자이므로, 학부모 부담금은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주장. 거짓입니다. 사립유치원은 현재 재산세, 취득세 같은 세제 혜택도 받고 있는 학교이자, 비영리 교육기관입니다. 따라서 관련법에 따라 학부모가 낸 돈도 교육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회계감사 시스템이 없다는 주장도, 지난해 2월 이미 관련법을 개정해 사립유치원에 맞는 세입세출 항목을 신설했기에 사실이 아닙니다. 한유총은 이에 대해 “(교육부와) 관점의 차이일 뿐 가짜뉴스가 아니며, 학부모를 상대로 홍보 차원에서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수연, 2018, 11, 20, <MBC 뉴스>)

아래의 보도 역시 어떤 맥락에서 해석하느냐에 따라 가짜뉴스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자유한국당 측은 국민일보가 홍준표 대표의 ‘위장 평화쇼’ 발언 때문에 한국당 지지율이 추락했다는 보도가 가짜뉴스라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해당 설문조사가 남북정상회담 전에 이뤄졌고, 이 기간에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변동이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국민일보의 보도는 사

실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설문조사에서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추락한 이유가 홍준표 대표의 발언 때문이라고 규정짓는 것은 해석의 영역에 가깝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가짜뉴스라고 규정하는 것 역시 모호하다. 왜냐면 이 시기 남북 정상회담에 관한 입장이 정부 여당과 자유한국당이 달랐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정당 지지율에 영향을 주었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뉴스는 진실과 거짓의 판별 영역이라기보다 해석 담론의 경쟁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한국당 정태욱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난 28일 국민일보가 보도한 <“위장평화쇼” 홍준표 ‘역풍’... 한국당 지지율 12% ‘추락’>이란 제목의 기사를 지목하면서 (중략) 정 대변인은 “해당 기사는 편향적 사실을 근거로 잘못된 내용을 사실인 듯 왜곡, 확대하여 배포하고 여론 조작을 의도하는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중략) 허성우 수석부대변인은 이어 논평을 내고 “기사가 인용한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조사시기가 4월 24~26일로 남북정상회담 전에 이뤄졌으며 한국당 지지율은 4월 13일, 20일, 27일 3주 연속 변동이 없었다”면서 “명백하게 악의적 의도를 가진 허위사실 유포이자, 자극적인 낚시성 제목을 달아 클릭을 유인해 포털의 메인화면을 차지하려는 언론이기를 포기한 댓글장사이자 추잡한 뉴스장사”라고 비판했다. (허남설, 2018. 4. 29, <경향신문>)

#### (4) 추정과 논리적 비약이 큰 온라인 담론의 속성

온라인 공간에서는 사회적 이슈를 두고서 온라인 이용자에게 호소력 있는 담론들이 생산, 확산된다. 그런데 이 담론들을 보면 때론 사실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짜라고만 규정할 수 있는지 모호한 내용들도 적지 않다. 동아일보의 “가짜뉴스 수사-내사 56%가 ‘문재인 대통령 비방글’” 기사를 보면 경찰이 특별 단속한 가짜뉴스 사례 가운데 문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여성 비서관들과 찍은 사진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찍은 사진을 모방 연출했다는 주장이 있다(조동주, 2018, 10, 12). 실제 두 사진은 공통점이 많다. 그래서 온라인 이용자의 의문 제기가 설득력을 얻는다. 하지만 사진의 구도가 우연의 일치라고 본다면 이 주장은 거짓이 될 수 있다. 공공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 이런 사안도 때론 가짜뉴스로 규정되고 경찰의 단속 대상이 되었다.

정작 단속한 건 대부분 문재인 대통령이나 북한에 대한 허위·비방성 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중략) 문 대통령을 허위 비방한 글은 9건으로 문 대통령이 8월 여성 비서관들과 함께 집무실에서 찍은 사진을 두고 ‘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무실 사진을 모방해 연출 사진을 찍었다’고 페이스북에 적은 글이 대표적 사례다. (조동주, 2018, 10, 12, <동아일보>)

아래의 사례는 자유한국당이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온라인 루머 사례이다. 이 당시 김성태 원내 대표가 단식 투쟁을 벌이는 동안 한 시민이 그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자유한국당이 제시한 사례는 ‘연양갱 테러당하고 농성 중단된 김성태’, ‘내부자 소행 정황’, ‘초코바 주는 척 얼굴 가격’을 들고 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온라인 이용자들은 특정 사건을 두고서 각자 판단하고 의견을 드러낼 수 있다. 이러한 추정과 의견 제시는 사실과 어긋나기도 하지만 온라인 이용자의 판단 오류를 의도성을 가진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접근하면 가짜뉴스가 되고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된다. 결국 공공의 안녕에 큰 위해를 미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짜뉴스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게 된다.

한국당은 ‘자작극’이라는 일부 온라인상 반응을 두고는 “뒷받침하는 ‘문위병’이 보수우파로 가장해 한국당과 지지층을 공격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페이스북에 “그 모습이 어떻게 짜고 칠 수 있는 장면인가”라고 했다. 당은 폭행 사건 관련 ‘가짜뉴스’에 대해 민형사상 고소도 하기로 했다. 당이 예시한 가짜뉴스는 ‘단식 중단 허위사실 보도’ ‘연양갱 테러당하고 농성 중단된 김성태’ ‘내부자 소행 정황’ ‘초코바 주는 척 얼굴 가격’ 등이다. (강병한, 2018, 5. 6. <경향신문>)

온라인 공간은 이용자들이 가볍게 의견을 드러내는 공간이다. 특정 이슈에 관해 키워드나 직간접 경험을 통해 알고 있는 사실로 판단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추정과 논리적 비약이 흔하게 나타난다. 그런데 만약 온라인 공간의 게시물에서 정확한 사실 여부만을 집중하게 된다면 온라인 공간에서 의견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 그만큼 적어질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시민의 정치 참여와 온라인 공간을 통한 여론 형성은 위축될 개연성이 크다. 따라서 사적 영역이 아닌 정치 영역에 관한 담론이고, 사회적 피해를 크게 남기지 않는다면 그것이 설사 가짜뉴스라 할지라도 법적 대응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 5) 가짜뉴스 담론의 형성 과정에 따른 사회적 실천 담론의 방향

언론 보도에 나타난 가짜뉴스 담론에서 가짜뉴스 담론을 형성하는 3요소는 아래의 <Figure 1>과 같이 정치 권력, 언론사, 사회적 맥락이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정치 권력은 여당, 정부 기관, 유력 야당이다. 정치 권력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어떤 사실이나 담론을 가짜뉴스로 낙인찍고 법적 대응을 고려하거나 반대로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며 옹호하기도 한다. 언론사는 가짜뉴스에

관한 의제를 제시하고 프레임을 결정한다. 언론 보도의 가짜뉴스 담론 형성이 정치 권력과 밀접한 MBC, 동아일보의 경우 주목하는 사례 역시 정파성을 띠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가짜뉴스 대응에 관한 방향 역시 여당 혹은 야당의 정치 권력과 유사한 입장을 견지했다. 이 연구에서 사회적 맥락의 범주는 가짜뉴스의 대상자, 가짜뉴스 생산과 유통자, 외부 전문가와 같은 오피니언 리더 등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경향신문의 경우 가짜뉴스에 관한 접근을 할 때 소수자 보호와 표현의 자유라는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중요한 준거가 되었고, 이러한 입장은 가짜뉴스에 관한 외부 필진의 의견과 접합하며 담론을 형성했다. 이들 보도 담론이 정치 권력이나 사회적 맥락과 어떻게 관계를 구성하느냐에 따라 가짜뉴스 규제 혹은 표현의 자유 추구처럼 사회적 실천 담론의 방향에도 영향을 주었다.



Figure 1. Fake news discourse and social practice

### (1) 정치 권력과 언론의 협력적 담론 형성

가짜뉴스에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는 보도들은 가짜뉴스의 폐해를 부각해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한다. 가짜뉴스의 생산과 확산 사례를 설명할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과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의 발달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가짜뉴스 문제까지 제시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짜뉴스에 관한 부정적 담론을 형성하면 가짜뉴스에 관한 법적 규제 역시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동아일보와 MBC 뉴스에 나타난 가짜뉴스 담론은 여당 혹은 야당의 정파적 접근과 궤를 같이한다. 즉 가짜뉴스 담론을 형성하는 언론 보도는 언론사의 정치 성향, 여당이나 야당의 정치 권력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이다.

동아일보는 2018년 상반기까지 가짜뉴스에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며 제재 방안을 시사했지만 하반기부터 가짜뉴스에 관한 다른 담론을 허용한다. 동아일보는 2018년 상반기 가짜뉴스에 관한 기사들을 보면 해외 사례를 소개하며 주로 가짜뉴스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강력한 제재에 초점을 둔다. 예를 들어 동아일보의 “佛도 가짜뉴스에 철퇴… 선거기간엔 해당 웹사이트 차단”(조은아, 2018, 1, 5), “정부는 사이트 차단, SNS기업은 경고 표시, 학교는 판별교육”(박용, 2018, 1, 9), “세계는 가짜뉴스와 전쟁…獨 24시간 방치에 640억원 물려”(동아일보, 2018, 1, 9), “가짜뉴스, 伊선 경찰이 팩트체크… 英은 전담조직 구성”(동정민, 2018, 1, 25), “프란치스코 교황 ‘가짜뉴스는 사탄의 속임수’”(손택균, 2018, 1, 26), “가짜뉴스, 中유명포털-트위터서 활개… ‘댓글 알바’ 200명-사이트 1만개 철퇴”(윤완준, 2018, 2, 7), “日산케이, 가짜뉴스 들통나 망신”(장원재, 2018, 2, 9), “獨도심 이수라장 만든 극우 가짜뉴스”(동정민, 2018, 8, 30), “아프리카 국가들이 가짜뉴스를 피하는 방법”(서동일, 2018, 11, 19) 기사들이 다루는 의제는 가짜뉴스에 관한 비판이다. 동아일보는 “시민 의식 일깨워주는 미디어 해독교육”이라는 외부 필진의 칼럼을 통해 진짜와 가짜뉴스를 구별할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하고(우병동, 2018, 6, 6), 팩트 체크를 통해 올바른 정보 구별을 제안한다(이원주, 2018, 8, 31).

하지만 가짜뉴스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던 동아일보 기사들은 2018년 하반기로 가면 가짜뉴스 비판 빈도가 눈에 띄게 적어지고 언론 보도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에 좀 더 비중 있게 주장한다. 가령, 동아일보의 “가짜뉴스에 뒤늦게 분노한 집권세력” 칼럼에서 한 논설위원은 집권당이 지난 정권에서 가짜뉴스 효과를 누렸으면서 현재는 불리한 뉴스들을 가짜뉴스로 몰고 간다며 비판한다. 그는 가짜뉴스 유형을 상업적 정치적 목적성을 갖고 허위 정보를 생산 및 유통하는 행위, 객관과 주관을 교묘히 섞어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 제대로 된 팩트 체크가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착오로 분류하며 가짜뉴스에 대한 사회적 대책은 상업적 정치적 목적의 허위 조작 정보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이기홍, 2018, 11, 1).

MBC 뉴스는 가짜뉴스의 소재 선택부터 정치 진영적 성격이 묻어난다. MBC 뉴스는 가짜뉴스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뇌출혈설이 어떻게 확산되었는지 과정을 추적한다. SNS를 통해 전파된 내용이 ‘추운 러시아 방문’, ‘청와대 출입 기자의 전언’, ‘일본 신문 기사가 근거라고 했지만, 해당 청와대 출입 기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고, 근거로 제시된 일본 신문 기사 역시 원문이 ‘그런 추측이 있다’라는 내용뿐이었다고 보도는 말한다(박영희, 2018, 7, 2). 트위터 게시물을 분석했던 미국 MIT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가짜뉴스가 새 소식이고, 내용도 자극적이기 때문에 정상 뉴스보다 6배 빨리 전파된다고 한다. 그리고 MBC의 또 다른 뉴스에서는 한 남성이 캐나다 가수 ‘저스틴 비버’로 변장해서 파파라치에 노출되었더니 인터넷과 언론에 진짜 저스틴 비버로 크게

소개되었다고 말한다(박지윤, 2018, 10, 31). 이처럼 MBC 뉴스는 지속적으로 가짜뉴스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강력한 처벌 등의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전중환, 2018, 4, 17). 물론 MBC의 이러한 접근이 반드시 법적 규제를 말한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MBC의 한 뉴스의 경우 한 중학교의 가짜뉴스 구별 교육을 사례로 보여주며 가짜뉴스 해결책으로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확대도 제안하기 때문이다(이필희, 2018, 11, 18). 하지만 MBC 뉴스는 2018년 언론 보도에서 가짜뉴스에 비판적 태도를 강하게 드러내며 가짜뉴스의 생산 과정과 문제의 심각성을 지속적으로 환기한다.

가짜 여론에 휘둘리지 않게끔, 비판적으로 정보를 바라보는 노력,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를 파괴하는 여론 시장의 작전 세력, 처벌을 강화해서라도 반드시 막아야 할 할 겁니다. (전중환, 2018, 4, 17, 〈MBC 뉴스〉) / 가짜뉴스가 범람하는 시대에 이처럼 의문을 갖고 미디어를 읽어내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능력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일부 주에서 이 같은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을 정규 교육 과정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국회에서 법안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필희, 2018, 11, 18, 〈MBC 뉴스〉)

이 두 언론사의 가짜뉴스에 관한 보도는 특정 정치 진영의 유불리에 따라 가짜뉴스에 관한 입장이나 태도가 선택되어 가짜뉴스에 관한 담론을 형성한다. 그렇게 형성된 가짜뉴스 담론을 근거로 이들 언론사는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규제를 주장하거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등을 제안한다. 그러나 동아일보처럼 가짜뉴스 비판 담론이 정치 진영적으로 불리하다고 여겨질 때 가짜뉴스 규제 주장은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비판적 접근이 나타나기도 했다.

## (2) 외부 전문가와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접합적 담론 형성

경향신문의 가짜뉴스에 관한 태도는 다음 사실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경향신문은 “민주 사회의 적 가짜뉴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라는 사실에서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가짜뉴스가 소수자를 공격하고 증오를 조장하지만, 당사자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나 반론권을 제공하지 않는 다며 가짜뉴스 문제점을 지적한다. 이러한 가짜뉴스가 국가 안보뿐만 아니라 민주 사회를 위태롭게 만든다며 시민 사회가 가짜뉴스에 대한 자율적 규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경향신문, 2018, 10, 2). 그럼에도 경향신문 사실은 수사 기관을 통한 가짜뉴스 처벌을 경계한다. 경향신문은 “허위정보 잡는다며 권위주의 정권 훔내내는 법무부”라는 사실에서 가짜뉴스를 방치해서는

안 되지만 수사기관의 개입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로 의견, 오보, 의혹 제기 등에서 의도적 허위 사실의 범주를 정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며 '미네르바 사건'의 판례를 근거로 제시한다(경향신문, 2018, 10, 16). 이처럼 경향신문은 사실을 통해 한편으로는 가짜뉴스를 강하게 비판하지만 수사 기관을 통한 단속과 처벌보다 시민 사회의 자율 규제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다.

경향신문은 동아일보나 MBC 뉴스와 비교할 때 가짜뉴스에 대한 유연한 태도를 갖는다. 경향신문의 외부 필진 칼럼들은 이런 여론 형성에 영향을 주는 담론을 제공한다. 물론 경향신문 역시 가짜뉴스를 옹호하기보다 비판적 입장을 견지한다. 외부 칼럼에서 윤태진 교수는 가짜뉴스 개념이 현실 공간에서 “잘못된 사실 관계가 포함된 기사, 낚시성 기사, 유언비어, 편향된 의견 기사” 등으로 확장되어 쓰인다고 지적한다(윤태진, 2018, 9, 2).

그러나 경향신문은 가짜뉴스 단속이나 법적 처벌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낸다. 이준웅 교수는 “진짜 언론이 필요한 이유”(이준웅, 2018, 3, 11), “가짜 학회 가짜뉴스”(이준웅, 2018, 8, 26), “인터넷 여론조작과 발언의 자유”(이준웅, 2018, 9, 30) 칼럼에서 가짜뉴스의 범주와 속성을 규정하기가 모호하고 가짜뉴스 규제가 자칫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가짜뉴스를 구별하는 언론의 참 역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문한다. 정은령 언론학 박사는 “허위정보와 길고 지루한 싸움을 해야 하는 이유”라는 칼럼에서 의혹 대상자들이 정치적 공방을 벌여야 할 사안을 “가짜뉴스다”라는 한 마디로 토론을 종결짓는다면 가짜뉴스와 관련한 당사자들의 태도를 비판한다(정은령, 2018, 10, 30). 경향신문의 “스티븐 브라이어 미 연방대법관 “가짜뉴스·혐오표현이라도 누구나 하고픈 말 하는 게 민주주의””라는 인터뷰 기사에서 스티븐 브라이어는 모두가 말할 기회를 주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말하며, 허용되고 금지되는 발언을 정하는 순간 권력자의 개입이 발생한다고 경고한다(이범준, 2018, 12, 4).

이처럼 사실이나 칼럼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가짜뉴스에 대한 경향신문의 논조는 가짜뉴스에 관한 담론 경쟁이 나타난다. 즉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지만 가짜뉴스를 단순히 가짜라고 말하기 쉽지 않은 가짜뉴스의 속성, 가짜뉴스의 법적 규제가 초래할 표현의 자유 위축 문제를 우려한다. 그래서 가짜뉴스에 대한 해결책으로 강제성 있는 법적 조치보다 자율 규제나 진위를 구별해서 제시하는 언론의 역할, 수용자의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능력 함양 등을 주문한다.



## 5. 결론 및 논의

각자의 사회적 정체성, 사람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그 사회의 역할적 산물에 가깝다. 즉 고유성을 가진 각자는 관점이 동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이슈에 관한 이해관계가 동일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 선을 설정하고 다른 생각을 용납하지 않는 태도는 결국 타자를 억압하는 폭력적 성향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Arendt, 1958/2017). 탈 진실 담론이 확산되는 시대에 한편으로 우리 사회는 진짜뉴스나 가짜뉴스나를 두고 사실 논쟁이 한창이다. 물론 가짜뉴스의 확산이 피해 당사자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여론 왜곡 등 사회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짜뉴스는 분명 문제점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가짜뉴스에 관한 담론이 우려스러운 점은 가짜뉴스의 입체적 속성을 간과한 채 선악의 이분법적 구도로 가짜뉴스에 접근하면 하나의 진실만이 강조되고, 법적 규제가 이뤄지면 시민의 다양한 생각이 억압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가짜뉴스에 관한 선행 연구들이 제시한 가짜뉴스의 정의와 속성에 부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한편으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지점에 의문을 갖고 시작했다. 현실 공간에서 부각되는 가짜뉴스란 무엇이 있으며, 그것은 어떠한 속성을 갖고 있을까? 가짜뉴스에 관한 담론을 형성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은 누구이며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을까? 가짜뉴스에 관한 담론 형성에 따라 사회적 실천은 어떠한 방향으로 논의될까? 그런 의문을 풀기 위해 2018년의 가짜뉴스에 관한 언론 보도를 비판적 담론분석 방법을 통해 분석하고, 실제 통용되는 가짜뉴스의 의미와 속성을 살펴보았다.

언론 보도에서 나타난 가짜뉴스의 개념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주류 언론과의 갈등 속에서 줄곧 주장하는 언론의 오보 논란과 다른 의미이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가짜뉴스의 속성으로 제시한 '뉴스 형식'은 이 연구의 가짜뉴스 주요 사례에서 찾기 어려웠다. '고의성' 역시 정치적 상대 진영을 비방하려는 악의는 엇보일지라도 가짜뉴스 생산자나 확산자가 거짓임을 알면서도 퍼뜨린다는 의도를 증명하기에는 단서가 부족했다. 이 연구에서 가짜뉴스로 제시된 사례들을 보면 한국 사회에서 가짜뉴스란 정치적 영역에서 특정 사람들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가짜뉴스라고 말하는 허위 사실 사례들 가운데는 진짜라고 말하기는 어렵더라도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모호한 요소, 부분적 사실 오류 여부보다 해석이나 맥락적 담론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사례들도 볼 수 있었다. 그럼에도 언론 보도에서는 이런 점들을 뭉뚱그려 '가짜뉴스'라는 낙인찍기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가짜뉴스에 관한 언론 보도를 살펴보면 가짜뉴스 공격이 외면하는 가짜뉴스의 입체적

속성을 엿볼 수 있다. 공적 사안에 관한 의혹 제기를 일단 가짜뉴스로 낙인찍는다거나, 정치적 공방이나 사실 논쟁이 있을 때 부분적 사실을 강조하며 가짜뉴스로 규정하려는 시도이다. 또한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담론을 특정 부분만 부각해 가짜뉴스로 몰아갈 수 있다는 점이다. 사회적 사실(social fact)은 과학적 사실과 달리 진실과 거짓을 논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사회적 사실 판단에는 권력 관계가 영향을 미치며, 참과 거짓의 문제라기보다 담론의 경쟁 영역이기 때문이다(Delgiaouri, 2018; Wihbey, 2019). 이런 점에서 보면 가짜뉴스에 관한 시비는 사회적 사실(social fact)의 담론적 속성을 간과한 채 특정 사실 여부만을 따지려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그리고 사실(fact) 논쟁 역시 의혹이나 문제 제기의 전체적 취지나 정치적 맥락 속에서 해당 사실을 해석하고 논하기보다 정치적 유희리에 따라 부분적 사실을 지나치게 부각해 그것만으로 진짜와 가짜를 판정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이는 언론 보도가 사회 문제에서 구조적 요인이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파편적이거나 일화적 요소에 치우치는 바람에 근본적 해결과 동떨어지는 공론 과정의 한계와 유사한 면이 있다(김상호·김병선, 2006). 또한 언론 보도처럼 팩트 확인이 외형적인 객관성이나 사실성을 갖추고 있더라도 담론적 차원에서 내용의 타당성과 진실 성과는 별개일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박대민, 2015; 송용희, 2005; 이준웅 외, 2007). 그래서 가짜뉴스 논쟁은 정치적 담론을 다양하고 풍부하게 만들기보다 파편적 사실 여부 확인이라는 협소한 지점에 머물게 하고, 정치적 공론장을 상반된 정치 담론의 경쟁과 숙의보다 승패 위주로 나아가게 할 우려가 있다.

가짜뉴스에 관한 담론은 정치 권력과 무관하지 않다. 가짜뉴스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주체는 정치 권력을 확보하고 있는 정부 및 여당이다. 야당의 의혹 제기나 상대 정치 진영의 목소리를 가짜뉴스로 낙인찍고, 국가 기관에 가짜뉴스 단속을 지속적으로 주문한다. 하지만 야당 역시 국가 권력 확보만 다를 뿐 가짜뉴스를 대하는 태도가 여당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야당 대표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가짜뉴스로 낙인찍고 법적 대응을 천명했다. 이 점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가짜뉴스를 다루는 철학적 입장이 있다기보다 정치 진영적으로 유리하면 묵인하면서도 불리하면 가짜뉴스로 몰아간다는 점을 시사한다. 구조적 측면에서 보면 권력을 확보한 정치 진영은 방어하는 입장에서 상대 정치 진영의 가짜뉴스에 더 많이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고, 정치 진영 간 권력 이동이 이뤄지면 새로이 권력을 획득한 정당도 마찬가지로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 이는 가짜뉴스라는 표현이 정부가 불편한 뉴스에 관한 정당성을 훼손하기 위한 시도에서 나왔다는 벤달과 로버슨(Bendall & Robertson, 2018)의 주장과 상통한다. 정리하면 가짜뉴스 담론은 권력을 가진 그룹이 상반된 정치성의 목소리를 억압하기 위해 가짜뉴스로 규정하는 속성이 반영되어 있다.

가짜뉴스 문제에 관한 언론의 담론 형성은 언론사와 정치 권력의 관계, 언론사와 사회적 맥락의 접합 속에서 이뤄졌다. 동아일보나 MBC 뉴스처럼 언론사가 정치 권력과 밀접하면 언론 보도 역시 정치권의 유희리에 따라 가짜뉴스에 관한 접근이 다르게 이뤄질 개연성이 높았고, 표현의 자유보다 규제에 더 무게의 중심이 실렸다. MBC 뉴스는 여당 진영의 가짜뉴스 입장과 궤를 같이하며 줄곧 가짜뉴스에 비판적인 태도를 드러낸다. MBC 뉴스가 문제를 제기하는 가짜뉴스 소개는 세월호, 남북한 단일팀 루머, 5.18 북한군 개입설, 문대통령 뇌출혈(건강 이상설), 난민 신청하면 정부가 돈을 준다, 대통령의 지지율, 이총리 베트남 방명록처럼 정치 진영적으로 편향성을 드러냈다. 또한 MBC 뉴스는 정부 기관의 가짜뉴스 규제를 전달하면서도 그것에 관한 비판적 시선이 잘 드러나지 않았다. 동아일보는 상반기에 가짜뉴스에 비판적인 태도를 강하게 드러냈지만, 하반기로 가면 야당 정치 진영과 궤를 같이하며 가짜뉴스 문제에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며 규제를 비판한다. 즉 동아일보와 MBC 뉴스는 언론사와 정치 진영과의 친소관계에 따라 가짜뉴스를 다루는 태도 역시 유사한 입장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반면 경향신문은 가짜뉴스에 관한 접근이 가짜뉴스의 다양한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고 외부 전문가의 담론을 수용하면서 정치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즉 경향신문은 소수자에 관한 가짜뉴스를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규제보다 표현의 자유를 더 중시하는 가치 추구형 태도를 나타냈다. 물론 경향신문 역시 가짜뉴스에 관한 비판적 인식이 자주 나타난다. 하지만 정치 진영적 친소관계에 따라 가짜뉴스에 대한 태도나 해결책을 말하기보다 예멘 난민 사례처럼 ‘소수자 보호’, 궁극적으로 지켜야 할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내세우며 가짜뉴스 담론에 접근한다.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외부 필진들의 칼럼은 가짜뉴스에 관한 경향신문의 관점을 다양하게 보완하는 역할을 했다.

슈메이커와 리즈(Shoemaker & Reese, 1996)는 미디어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말한 바 있다. 가짜뉴스 담론에서 나타나는 MBC 뉴스와 동아일보의 논조는 정치 권력과의 관계라는 언론사 외적 요인과 언론사 조직 내의 게이트키퍼 과정이 상관성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경향신문의 사례는 미디어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언론사가 추구하는 이데올로기였으며, 가짜뉴스에 관한 다양한 담론을 제공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 요소는 외부 필진의 칼럼들이었다. 즉 열린 형식의 언론 보도 시스템이 가짜뉴스에 관한 다양한 담론을 풍성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악 구도를 벗어나 가치 지향적 접근을 가능케 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짜뉴스란 한편으로 타인이나 사회에 피해를 끼치는 거짓 정보를 말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정치 영역이나 공적 영역의 어떤 사람들 입장에서 불편하거나 동의하기 어려운 뉴스에 불과할 수도 있다. 그동안 국내의 가짜뉴스에 관한 선행 연구들이 가짜뉴스의

속성을 정의할 때 허위성, 기만적 의도, 뉴스형식을 강조했지만(오세욱·정세훈·박아란, 2017; 유의선, 2018; 황용석·권오성, 2017), 이 연구는 현실적 담론에서 그런 정의가 가짜뉴스가 갖고 있는 입체성을 드러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공적 영역에서 의혹 제기를 받는 기관이나 사람들이 책임 회피성 수단으로 가짜뉴스 낙인을 활용하거나, 진위를 확인하기 모호한 내용이나 해석적 담론을 일부 사실에 국한해서 가짜뉴스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가짜뉴스의 허위적 속성을 논할 때 부분적 사실에 주목하기보다 담론의 측면에서 해석적 영역으로 접근하며 입체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또한 가짜뉴스의 고의성 역시 조직적 차원의 여론 조작이 아니라면 온라인 이용자들의 단순한 의견 표현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많은 온라인 이용자들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고 엄밀한 논리적 사고와 판단을 하기보다 직간접 경험을 바탕으로 일부의 단서를 확장해 사고하며 어떤 사실을 추정하는 경향이 있다(Allan, 2006/2008). 그래서 잘못된 정보도 많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온라인 이용자의 특성을 간과한 채 가짜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가짜뉴스 생산자나 유통자의 고의성을 묻기는 어렵다. 또한 뉴스 형식의 경우 한국 사회에서 오보를 말할 때 적용할 수는 있으나, 실제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가짜뉴스가 뉴스 형식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기존의 뉴스가 추구했던 객관성 형식에서도 오보가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해 일부의 사실 오류에만 집착하기보다 정치 담론 측면에서 여러 입체적 속성을 고려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

헌편 가짜뉴스에 관한 이해관계와 가치 판단이 다르면 접근 방법과 해법 역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가짜뉴스의 윤리적 문제와 가짜뉴스의 사회적 폐해가 담론의 중심이 되면 가짜뉴스에 관한 해법은 사회적 제재에 가까울 수밖에 없다. 가짜뉴스에 비판적이었던 언론사의 가짜뉴스에 관한 논조는 가짜뉴스의 사회적 제재를 주문했다. 반면 언론사가 가짜뉴스의 다양한 사회적 맥락과 가짜뉴스의 속성을 수용할수록 언론사의 가짜뉴스에 관한 담론은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었다.

언론 보도에서 가짜뉴스의 생산과 유통의 근거지로 지목되는 SNS나 유튜브 등 온라인 공간은 과거에 비해 제약이 많아졌다. 이경락과 백선기(2010)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주도했던 각종 인터넷 규제들이 청소년 보호나 유해 사이트 차단 등의 취지를 넘어 비판적 콘텐츠를 차단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터넷 실명제, 공직 선거법, 허위사실유포죄, 명예훼손, 모욕죄 등으로 이미 온라인 공간은 의견 표출에 제약이 많아졌다. 온라인 공간에서 이용자가 느낌, 생각, 감정 등을 잘못 드러낼 경우 법적 처벌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는 위축되고, 결국 온라인 공간에서 시민의 정치 참여 축소와 담론과 콘텐츠의 다양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가짜뉴스에 관한 선악의 이분법적 담론이 우려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까지 온라인 공간에서 확대되었던 규제 과정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 권력과 언론의 이해관계에 따라 협력적 담론이 형성되면 가짜뉴스의 심각성이 실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보다 과장될 수 있다. '제3자 효과'에 따르면 사람들은 바람직한 메시지보다 부정적 메시지에서 본인보다 타인이 더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고 판단한다(Davison, 1983; Perloff, 1999). 가짜뉴스 역시 사람들은 자신이 받는 영향력을 작게 인식하면서도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크다고 생각한다(Stefanita et al., 2018). 이는 결국 가짜뉴스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확산시키고 또 다시 규제와 표현의 위축을 가져오는 악순환이 재현될 수 있다.

하지만 온라인 공간의 담론은 진실과 허위 정보가 혼재된 양면적 속성을 갖고 있다. 한편으로는 거짓이 난무하지만 한편으로 사실로 인정될 수 있는 정보도 많이 존재하며 검색이나 논쟁을 통해 검증이 가능하다. 온라인 공간은 거짓 루머나 허위 정보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지만, 상반된 담론 역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Allan, 2006/2008). 가짜뉴스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규제 고민할 때는 이러한 매체와 담론의 속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가짜뉴스 담론과 규제는 대개 사적 영역보다 정치 영역을 대상으로 한다. 정치 담론이나 공적 영역에서 가짜뉴스가 확산될 경우, 일시적으로는 오해를 받을 수 있더라도 정치인이나 공공기관 등은 충분히 가짜뉴스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나 언론 보도를 이용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다. 어찌보면 정치 영역에서 담론이란 사람들이 믿고 싶은 것이 우선될 뿐(Sunstein, 2009/2011), 정보나 뉴스의 정확성은 부차적인 문제일 수 있다.

물론 가짜뉴스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맹목적인 표현의 자유만을 내세운다면 그것 역시 논란의 여지가 있다. 가짜뉴스 피해자들이 겪는 정신적 상처, 의도적 기만행위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피해, 사회 혼란과 여론 왜곡 등은 가짜뉴스 규제를 말하는 주요 근거가 된다. 더군다나 정치적 상업적 목적으로 조직적인 허위 정보가 생산된다면 마냥 방치할 수 없는 점도 있다.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의 수정헌법 1조도 사회적 해악이 클 때는 공익을 위해 제한할 수 있고(박홍원, 2004), 스웨덴 역시 국가 안보나 공동체의 삶을 위협할 때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Kenyon et al., 2017). 표현의 자유는 공동체를 위한 책임 의식이 전제될 때 설득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적 영역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회적 피해가 심각하면 표현의 자유를 맹목적으로 옹호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가짜뉴스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가짜뉴스의 단면적 피해만 강조되어 낙인찍기보다, 가짜뉴스의 속성과 담론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되고, 실질적인 피해나 피해가 합리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그런 점에서 가짜뉴스에 관한 사회적 담론에 문제

를 제기하고, 가짜뉴스에 관한 다수 선행연구와 다른 시선에서 접근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둘 수 있다. 가짜뉴스 해결을 위한 방향은 다양한 경쟁 담론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구조적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다시 말해 정치와 같은 공적 영역에서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유포하는 사람들이 정말 가짜뉴스를 믿고 있다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대응은 상대의 목소리를 힘으로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상반된 근거를 제시하며 담론이 경쟁하는 것이다. 가짜뉴스가 부각하는 이슈를 두고서 상반된 담론이 동시에 제시된 후, 그 사실을 믿고 안 믿고는 개인의 영역이기 때문에 누구도 강요할 수 없다. 사회가 할 일은 특정 이슈에 관한 상반된 담론의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구조적 환경을 조성하고 진실에 관한 판단은 각자에게 맡기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 나타난 한계를 성찰하며 후속 연구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이 연구는 언론 보도에 나타난 가짜뉴스 의미가 어떻게 통용되는지를 분석하고 가짜뉴스 담론 분석을 근거로 가짜뉴스 해결을 위한 사회적 실천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했다. 하지만 가짜뉴스에 관한 사회적 해법 논의는 언론 보도에 나타난 기사나 칼럼 등을 정리해서 제안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왜냐하면 가짜뉴스에 관한 언론 보도 담론은 가짜뉴스 담론의 입체적 속성을 분석하기보다 이미 가짜뉴스에 대한 낙인을 전제로 구성되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이다. 가짜뉴스에 관한 담론이 균형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 보도에 제시된 해결책은 추상적일 수밖에 없었다. 다만 사회적 실천 방향으로 규제, 표현의 자유 옹호, 미디어 리터러시, 팩트 체크 등의 방법이 제안되고 있다는 점까지만 확인할 수 있었다. 후속 연구는 이 연구에 나타난 가짜뉴스 담론의 다양한 속성을 바탕으로 어떻게 가짜뉴스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지에 관한 체계적인 문헌 연구나 해외 등의 사례 조사가 다양한 시각에서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 References

- Allan, S. (2006). *Online news Journalism and the Internet*. UK: Open University Press.
- Arendt, H. (1958). *The human condition*. Chicago, Illinois: The University of Chicago.
- Bakalis, C. (2018). Rethinking cyberhate laws. *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 law*, 27(1), 86-110.
- Bang, S. H., & Lee, G. (2013). Exploring the unconstructed reality: A comparative analysis of frames on 'The Four Rivers Restoration Project' between daily newspapers and press release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7(1), 163-186.
- Baym, G. (2005). The Daily Show: Discursive integration and the reinvention of political journalism. *Political Communication*, 22, 259-276.
- Bendall, M. J., & Robertson, C. (2018). The crisis of democratic cul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Media & Cultural Politics*, 14(3), 383-391.
- Berkowitz, D., & Schwartz, D. A. (2016). Miley, CNN and The Onion: When fake news becomes realer than real. *Journalism Practice*, 10(1), 1-17.
- Brewer, P. R., & Marquardt, E. (2007). Mock news and democracy: Analyzing The Daily Show. *Atlantic Journal of Communication*, 15(4), 249-267.
- Brubaker, J. (2008). Best supporting actor: The third-person effects of celebrity political endorsements. *Ohio Communication Journal*, 46, 1-13.
- Buturoiu, R., Durach, F., Udrea, G., & Corbu, N. (2017). Third-person perception and its predictors in the age of Facebook. *Journal of Media Research*, 10(2), 18-36.
- Carabine, J. (2001). Unmarried motherhood 1830-1990: A genealogical analysis. In Wetherell, M. & Taylor, S. & Yates, S. (eds) *Discourse as data: A guide for analysis* (pp. 267-310). London: Open University Press.
- Davison, W. P. (1983). The third-person effect in communication. *Public Opinion Quarterly*, 47, 1-15.
- Deligiaouri, A. (2018). Discursive construction of truth, ideology and the emergence of post-truth, narratives in contemporary political communi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Media & Cultural Politics*, 14(3), 301-315.
- Elliott, D. (2007). Getting Mill right. *Journal of Mass Media Ethics*, 22(2&3), 100-112.
- Fairclough, N. (1992). *Discourse and social change*. UK: Cambridge.

- Garrett, R. K., & Stroud, N. J. (2014). Partisan paths to exposure diversity: differences in pro- and counter attitudinal news consumption. *Journal of Communication*, 64, 680-701.
- Golan, G. J., & Lim, J. S. (2016). Third person effect of ISIS's recruitment propaganda: Online political self-efficacy and social media activism.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cation*, 10, 4681-4701.
- Hardy, C., & Phillips, N. (1999). No joking matter: Discursive struggle in the Canadian refugee system. *Organization Studies*, 20(1), 1-24.
- Hoffner, C., & Buchanan, M. (2002). Parents' responses to television violence: the third-person perception, parental mediation, and support for censorship. *Media Psychology*, 4, 231-252.
- Hwang, Y., & Kwon, O. (2017). A study on the conceptualization and regulation measures on fake news: Focused on self-regulation of internet service providers. *Journal of Media Law, Ethics and Policy Research*, 16(1), 53-101.
- Jeong, I. (2010). A trend analysis of the metro sections of news media in Korea during 1998 and 2009.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 Information*, 50, 143-163.
- Kang, M.-K. (1994). A study on the reality composition of economic crisis in economic news. *Media & Society*, 3, 92-131.
- Kenyon, A. T., Svensson, E., & Edström, M. (2017). Building and sustaining freedom of expression: Considering Sweden. *Nordicom Review*, 38(1), 31-45.
- Kim, K.-H. (2012). Changes in news consumption and the evolution of news through news portals and websites of news outlets. *Journal of communication research*, 49(2), 5-36.
- Kim, S.-H., & Kim, B.-S. (2006). An investigation on the process of the journalistic construction of social polarization through the analysis of broadcasting news. *Journal of Communication Science*, 6(3), 99-140.
- Ladyman, J. (2001). *Understanding Philosophy of Science*. London: Routledge.
- Lee, C. (2012). A study on characteristics, sensationalism and reality representation of CCTV video on TV news. *Broadcasting & Communication*, 13(4), 5-43.
- Lee, W. (2018). What is fake news? -A multidimensional discussion of fake news concepts and scopes-. *Journal of Media and Defamation Law*, 4(2), 173-214.
- Lo, V., & Wei, R. (2002). Third-person effect, gender and pornography on the internet.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46(1), 13-33.
- Marechal, N. (2015). Ranking digital rights: human rights, the internet and the fifth estate.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cation*, 9, 3440-3449.

Mill, J. S. (1982). *On Liberty* (Shields, C. V. ed.). Indianapolis: Bobbs-Merrill Educational Publishing. (Original work published 1859).

Oh, S. W., Jeong, S.-H., & Park, A. R. (2017). *Fake news status and issues*. Seoul: Korea Press Foundation.

Park, D. (2015). A study of double validity claims in quotations: News source network analysis of news on the four major rivers project in the Dong-A Ilbo and the Hankyoreh.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9(5), 121-151.

Park, H.-W. (2004). The concept of media accountability and social responsibility theory reconsidered. *Media & Society*, 12(3), 8-54.

Perloff, R. M. (1999). The third-person effect: A critical review and synthesis. *Media Psychology*, 1, 353-378.

Phillips, N., & Hardy, C. (2002). *Discourse analysis: Investigating processes of social construction*. Thousand Oaks: Sage.

Rhee, J. W., Yang, S.-M., Kim, K. C. & Song, H. J. (2007). Direct quotations in newspaper headlines in the coverage of the local election on May 31, 2006.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1(3), 64-90.

Shoemaker, P. J., & Reese, S. D. (1996). *Mediating the Message: Theories of influences on mass media content* (2nd ed.). New York: Longman.

Shudson, M. (2011). *The sociology of news* (2nd ed.). New York: W.W.Norton & Company.

Song, Y.-H. (2005). A study on the rhetorical devices to enhance the factuality in the news of the society pages in Korean national newspaper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49(3), 80-104.

Ştefanita, O., Corbu, N., & Buturoiu, R. (2018). Fake news and the third-person effect: They are more influenced than me and you. *Journal of Media Research*, 11(3), 5-23.

Stroud, N. J. (2010). Polarization and partisan selective exposure. *Journal of Communication*, 60, 556-576.

Sunstein, C. R. (2009). *Going to extremes: How like minds unite and divide*. UK: Oxford.

Supreme Court (2011, 9, 2). Sentence 2009da52649 the supreme court decision. Retrieved from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60160&q=%EA%B4%91%EC%9A%B0%EB%B3%91&nq=&w=panre&sect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1&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1&p1=&p](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60160&q=%EA%B4%91%EC%9A%B0%EB%B3%91&nq=&w=panre&sect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1&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1&p1=&p)

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  
=&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  
ryn=N&idgJyul=01&newsimyn=Y&tabId=&save=Y&bubNm=

- Tuchman, G. (1978). *Making News: A study in the construction of Reality*. New York : Free Press.
- Wihbey, J. P. (2019). *The social fact: News and knowledge in a networked world*. MA: The MIT press.
- Yoo, E. (2018). Legal regulation of fake news: Focusing on the protection of societal legal interest. *Journal of Media Law, Ethics and Policy Research*, 17(2), 39-68.
- Youn, S., Faber, R. J., & Shah, D. V. (2000). Restricting gambling advertising and the third-person effect. *Psychology & Marketing*, 17(7), 633-649.
- Yun, S. O. (2018). A discussion on the concept and scope of fake news. *Journal of Media Law, Ethics and Policy Research*, 17(1), 51-84.

최초 투고일 2019년 10월 11일  
게재 확정일 2019년 11월 29일  
논문 수정일 2019년 12월 1일

## 부록 1

- 강명구 (1994). 경제뉴스에 나타난 경제위기의 현실구성에 관한 연구. <언론과 사회>, 3권, 92-131.
- 김경희 (2012). 뉴스 소비의 변화와 뉴스의 진화. <언론정보연구>, 49권 2호, 5-36.
- 김상호·김병선 (2006). 방송 뉴스 분석을 통해 살펴본 양극화의 사회적 구성. <언론과학연구>, 6권 3호, 99-140.
-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정정·반론]. Retrieved from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60160&q=%EA%B4%91%EC%9A%B0%EB%B3%91&nq=&w=panre&sect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1&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1&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01&newsimyn=Y&tabId=&sav e=Y&bubNm=](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60160&q=%EA%B4%91%EC%9A%B0%EB%B3%91&nq=&w=panre&sect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1&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1&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01&newsimyn=Y&tabId=&sav e=Y&bubNm=)
- 박대민 (2015). 사실기사의 직접인용에 대한 이중의 타당성 문제의 검토: <동아일보> 와 <한겨레신문> 의 4대강 추진 논란 기사에 대한 뉴스 정보원 연결망 및 인용문 분석. <한국언론학보>, 59권 5호, 121-151.
- 박홍원 (2004). 미디어 어카운터빌리티 개념을 통한 사회책임이론의 재조명. <언론과 사회>, 12권 3호, 8-54.
- 송용희 (2005). 한국 종합일간지 기사의 사실성 입증 기제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49권 3호, 80-104.
- 오세욱·정세훈·박아란 (2017). <가짜뉴스 현황과 문제점>.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유의선 (2018). 가짜뉴스의 법적 규제. <언론과 법>, 17권 2호, 39-68.
- 이준웅·양승목·김규찬·송현주 (2007). 기사 제목에 포함된 직접인용부호 사용의 문제점과 원인. <한국언론학보>, 51권 3호, 64-90.
- 이창훈 (2012). CCTV영상의 보도 특성과 선정성, 현실 재현에 관한 연구.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13권 4호, 5-43.
- 윤성욱 (2018). 가짜뉴스의 개념과 범위에 관한 논의. <언론과 법>, 17권 1호, 51-84.

- 정일권 (2010). 사회면 기사 분석(1998년~2009년)을 통해 본 뉴스 미디어의 현실구성. <한국언론 정보학보>, 50권, 143-163.
- 황용석·권오성 (2017). 가짜뉴스의 개념화와 규제수단에 관한 연구. <언론과 법>, 16권 1호, 53-101.
- Allan, S. (2006). *Online news Journalism and the Internet*. UK: Open University Press.
- 한국언론재단 (편역) (2008). <온라인 뉴스: 저널리즘의 신세계>. 서울: 한국언론재단.
- Arendt, H. (1958). *The human condition*. Chicago, Illinois: The University of Chicago.
- 이진우 (역) (2007). <인간의 조건>. 서울: 한길사.
- Mill, J. S. (1982). *On Liberty* (Shields, C. V. ed.). Indianapolis: Bobbs-Merrill Educational Publishing. (Original work published 1859). 서병훈 (역) (2005). <자유론>. 서울: 책세상.
- Sunstein, C. R. (2009). *Going to extremes: How like minds unite and divide*. UK: Oxford. 이정인 (역) (2011). <우리는 왜 극단에 끌리는가>. 서울: 프리뷰.
- Ladyman, J. (2001). *Understanding philosophy of science*. London: Routledge. 박영태 (역) (2003). <과학철학의 이해>. 서울: 이학사.
- Shoemaker, P. J., & Reese, S. D. (1996). *Mediating the Message: Theories of influences on mass media content* (2nd ed.). New York: Longman. 김원용 (역) (1997) <매스미디어 사회학>. 서울: 나남출판.
- Shudson, M. (2011). *The sociology of news* (2<sup>nd</sup> ed.). New York: W.W.Norton & Company. 이강형 (역) (2014). <뉴스의 사회학>.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Tuchman, G. (1978). *Making News: A study in the construction of Reality*. New York: Free Press. 박홍수 (역) (1995) <메이킹 뉴스>. 서울: 나남출판.

## 부록 2 : 가짜뉴스 담론분석 언론보도\*

- 강병한 (2018, 2, 2). 홍준표, '류여해 주장 보도' MBN에 "기자 철수" 한국당 출입금지. <경향신문>.
- 강병한 (2018, 5, 6). '김성태 기습폭행'...관 키우려는 한국당. <경향신문>.
- 경향신문 (2018, 10, 2). 민주사회의 적 가짜뉴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경향신문>.
- 경향신문 (2018, 10, 16). 허위정보 잡는다며 권위주의 정권 흉내내는 법무부. <경향신문>.
- 경향신문 디지털뉴스팀 (2018, 10, 10). "국민 5명 중 2명 모바일 동영상 '가짜뉴스'에 속는다". <경향신문>.
- 고미석 (2018, 10, 24). '영망이다'. <동아일보>.
- 구정은 (2018, 9, 4). 난민이 싫으면 석유를 끊어라. <경향신문>.
- 권란 (2018, 2, 2). 홍준표 대표, '성희롱 의혹' 보도한 언론에 "출입금지". <SBS 뉴스>.
- 권지윤 (2018, 10, 2). 인권교육이 동성에 찬성?...반대 운동에 결국 법안 철회. <SBS 뉴스>.
- 김기태 (2018, 6, 26). 이재명 측, 김영환·김부선 고발...스캔들 의혹' 검찰로. <SBS 뉴스>.
- 김서중 (2018, 2, 4). 전통적 매체는 여전히 중요. <경향신문>.
- 김성규 (2018, 6, 26). SNS에 지쳐가는 사람들. <동아일보>.
- 김소정 (2018, 11, 16). 김성태·김용태"숙명여고 교무부장=김상곤 딸 담임" → '가짜뉴스' 망신. <동아일보>.
- 김재중 (2018, 10, 2). 이 총리 "가짜뉴스 더는 묵과못해"...가짜뉴스와 전쟁 선포. <경향신문>.
- 김준석 (2018, 9, 30). 자유한국당도 "가짜뉴스 No"...자체 방송 확대하며 '대응'. <MBC 뉴스>.
- 김지혜 (2018, 9, 28). 이 총리 "베트남 주석에게 쓴 방명록으로 가짜뉴스...야비한 짓 멈추시길". <경향신문>.
- 김태훈 (2018, 10, 13). 가짜뉴스를 피할 방법은. <경향신문>.
- 김한솔 (2018, 3, 5). 민주당 가짜뉴스 449건 고소·고발...일부 교회 '민주당은 공산당' 강연. <경향신문>.
- 김한솔 (2018, 10, 16). 김태년 "가짜뉴스는 사회적 독극물, 사회악". <경향신문>.
- 남지원 (2018, 3, 16). 두 달간 종이신문만 봤더니...소식 늦어 불편하지만 가짜 아닌 진짜뉴스를 읽게 된다. <경향신문>.
- 노도현 (2018, 10, 11). "가짜뉴스 대책은 보수언론 재갈물리기" "정부가 대응하는 건 당연". <경향신문>.

\* 뉴스 검색 분석 사이트인 빅카인즈(www.bigkinds.or.kr)에서 검색한 언론 보도임.

노도현 (2018, 10, 18). 한유총 “박용진의 비리 유치원 명단은 가짜뉴스”…‘적반하장’. <경향신문>.

노도현·박순봉 (2018, 1, 29). 방통위, 오보·가짜뉴스 대응 ‘민간 팩트체크’ 지원한다. <경향신문>.

동아일보 (2018, 1, 9). 세계는 가짜뉴스와 전쟁…獨 24시간 방치에 640억원 물려. <동아일보>.

동아일보 (2018, 3, 23). 포털의 ‘덧글 개미지옥’에 병드는 대한민국. <동아일보>.

동아일보 (2018, 12, 20). “군사합의 비판은 가짜뉴스”라는 軍의 비뚤어진 언론관. <동아일보>.

동정민 (2018, 1, 25). 가짜뉴스, 伊선 경찰이 팩트체크… 英은 전담조직 구성. <동아일보>.

동정민 (2018, 8, 30). 獨도심 이수라장 만든 극우 가짜뉴스. <동아일보>.

류인하 (2018, 3, 17). “아버지가 또 태극기집회에 가셨다” 가족갈등과 노인소외. <경향신문>.

박세용 (2018, 10, 21). 가짜뉴스 사라질 수 있을까?…규제안 따져보니. <SBS 뉴스>.

박순봉 (2018, 2, 2). 홍준표, MBN에 법적 조치 예고 “우리 당을 성희롱당으로 몰고가려는 음모”. <경향신문>.

박영희 (2018, 7, 2). “문 대통령 뇌출혈”?…가짜뉴스 6배 빠르다. <MBC 뉴스>.

박 용 (2018, 1, 9). 정부는 사이트 차단, SNS기업은 경고 표시, 학교는 관별교육. <동아일보>.

박 용 (2018, 4, 23). 저커버그와 이해진은 ‘남탓’ 할 수 없다. <동아일보>.

박지윤 (2018, 10, 31). ‘가짜 뉴스’ 만들기…이색 실험. <MBC 뉴스>.

배재학 (2018, 1, 3). ‘혐오발언·가짜뉴스 방치하면 거액 벌금’ 세계 첫 시행. <SBS 뉴스>.

배주환 (2018, 5, 17). 5·18 북한군 개입설…가짜뉴스에 공공기관 광고까지. <MBC 뉴스>.

배준우 (2018, 1, 16). “가짜뉴스 등 선거범죄 무관용 원칙 구속수사”. <동아일보>.

손택균 (2018, 1, 26). 프란치스코 교황 “가짜뉴스는 사탄의 속임수”. <동아일보>.

서동일 (2018, 11, 19). 아프리카 국가들이 가짜뉴스를 피하는 방법. <동아일보>.

서의동 (2018, 7, 4). 예멘 난민 사태가 일깨운 것들. <경향신문>.

서혜연 (2018, 12, 19). 홍준표 ‘홍카콜라’ 첫 방송…“막말·가짜 뉴스” 비판. <MBC 뉴스>.

선명수 (2018, 1, 28). 경찰, 6·13 지방선거 관련 가짜뉴스·해킹 집중 단속. <경향신문>.

선명수 (2018, 8, 7) 이성호 인권위원장 “난민법 폐지 불가 환영…편견·혐오 확산 대응해야”. <경향신문>.

신무경 (2018, 5, 17). ‘가짜뉴스’에 똥통 당한 카카오. <동아일보>.

오현석 (2018, 10, 1). 가짜 뉴스·이념 편향…극우성향 유튜브 채널 ‘몰머리’. <MBC 뉴스>.

우경임 (2018, 7, 31). SNS 기업 추가 폭락. <동아일보>.

우병동 (2018, 6, 6). 시민 의식 일깨워주는 미디어 해독교육. <동아일보>.

유설희 (2018, 4, 13). “가짜뉴스 중간유포자도 처벌” 지방선거 D-60 앞두고 경찰 ‘선거사범 수사상

- 황실' 열어. <경향신문>.
- 윤다빈 (2018, 11, 20). 靑국민청원 절반이 '고발-처벌요구'... 그중 14%는 팩트 오류. <동아일보>.
- 윤완준 (2018, 2, 7). 가짜뉴스, 中유명포털-트위터서 활개... '댓글 알바' 200명-사이트 1만개 철폐. <동아일보>.
- 윤우열 (2018, 12, 13). 이언주, 김미화 '가짜뉴스' 지적에 "위원장 개인 능력으로 갔나...팩트 궁금". <동아일보>.
- 윤태진 (2018, 9, 2). '가짜 뉴스'와 '나쁜 뉴스'. <경향신문>.
- 이기홍 (2018, 11, 1). 가짜뉴스에 뒤늦게 분노한 집권세력. <동아일보>.
- 이덕영 (2018, 5, 18) "'5·18 북한군 개입설', 이미 사실 무근으로 결론". <MBC 뉴스>.
- 이명희·이진주 (2018, 10, 22). 한국당 "일자리 약탈" 2차 총공세...여당은 "가짜뉴스" 맞불. <경향신문>.
- 이범준 (2018, 12, 4). 스티븐 브라이어 미 연방대법관 "가짜뉴스·혐오표현이라도 누구나 하고픈 말 하는 게 민주주의". <경향신문>.
- 이보라 (2018, 11, 23). 윤순진 서울대 교수 환경대학원 "성인 10명 중 6명, 가짜뉴스 접했다" ... 가짜뉴스 출처는?. <경향신문>.
- 이원주 (2018, 8, 31). "유튜브 찾으면 10대, 포털 검색하면 30대". <동아일보>.
- 이유진(2018, 7, 11). 언론·정치인의 '선부른 입' '난민 가짜뉴스' 무한 확산. <경향신문>.
- 이재민 (2018, 4, 15). 세월호 유가족 겨냥 가짜뉴스·SNS... '이중삼중' 가해. <MBC 뉴스>.
- 이재우 (2018, 3, 6). '가짜뉴스' 씩부터 잘라야. <동아일보>.
- 이준웅 (2018, 3, 11). 진짜 언론이 필요한 이유. <경향신문>.
- 이준웅 (2018, 8, 26). 가짜학회 가짜뉴스. <경향신문>.
- 이준웅 (2018, 9, 30). [미디어 세상]인터넷 여론조작과 발언의 자유. <경향신문>.
- 이지선 (2018, 1, 17). "동네 민주주의로 전환 기회...가짜뉴스 등 엄정 대처할 것". <경향신문>.
- 이지훈 (2018, 11, 17). 사실 확인도 전에 "여혐 폭행" 낙인... 가짜뉴스 불지른 靑청원. <동아일보>.
- 이필희 (2018, 11, 18). "진짜같은 가짜뉴스"... '미디어 교육'으로 잡아낸다. <MBC 뉴스>.
- 이필희 (2018, 11, 23). 10명 중 6명 "가짜뉴스 봤다"...주요 출처 '유튜브'. <MBC 뉴스>.
- 임찬중 (2018, 10, 16). "가짜 뉴스 엄단" 법무부 발표에... "과거 정부와 뭐가 다른가". <SBS 뉴스>.
- 임찬중 (2018, 10, 17). "가짜뉴스 적극 수사" 발표 논란...과거 사례 보면 '우려'. <SBS 뉴스>.
- 장연재 (2018, 12, 13). 김미화 "이언주, 내가 남북철도 추진위장이라니...가짜뉴스, 사과해". <동아일보>.
- 장원재 (2018, 2, 9). 日산케이, 가짜뉴스 들통나 망신. <동아일보>.

- 장원재 (2018, 10, 9). 이낙연 총리 “가짜뉴스 대책 미흡하다” 발표 연기 지시. <동아일보>.
- 장원재 (2018, 10, 24). 輿자문교수도 “가짜뉴스 별도입법 반대”. <동아일보>.
- 조동주 (2018, 10, 12). 가짜뉴스 수사-내사 56%가 ‘문재인 대통령 비방글’. <동아일보>.
- 장훈경 (2018, 10, 21). 정부의 ‘가짜뉴스 전쟁’ 실효성 있나?...논란 계속. <SBS 뉴스>.
- 전종환 (2018, 4, 17). ‘여론 조작’ 판치는 인터넷. <MBC 뉴스>.
- 정은령 (2018, 10, 30). 허위정보와 길고 지루한 싸움을 해야 하는 이유. <경향신문>.
- 정환보 (2018, 9, 28). 청, ‘팩트체크’로 신속 반격...강 대 강 치닫는 ‘심재철 폭로’. <경향신문>
- 조은아 (2018, 1, 5). 佛도 가짜뉴스에 철퇴... 선거기간엔 해당 웹사이트 차단. <동아일보>.
- 주영재 (2018, 3, 2). 페이스북, 6개국서 뉴스피드 분리 실험... “가짜뉴스 늘고 중요 뉴스 접근 막아” 비판. <경향신문>.
- 주영재 (2018, 6, 25). SNS 피로도 왔나 ... 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 가입률 · 이용시간 감소. <경향신문>.
- 최인진 (2018, 6, 26). 김부선 “이재명, 진실을 호도하는 저열한 술수 중단하라”. <경향신문>.
- 최인진 (2018, 11, 8). 경찰, 이재명이 고발한 김부선 사건, ‘불기소 의견’ 검찰 송치. <경향신문>.
- 최재원 (2018, 8, 10). 트위터 이어 페이스북에도 ‘싫어요’ 늘어. <동아일보>.
- 최정아 (2018, 5, 30). 김영환이 제기한 이재명 ‘형님 · 일베 · 여배우스캔들’ 의혹...이재명 해명 보 니?. <동아일보>.
- 최정아 (2018, 6, 26). 이재명 측, 김영환·김부선 고발...“옥수동 밀회” 주장 명백한 거짓”. <동아일보>.
- 최정아 (2018, 6, 27). 김영환 “이재명 직접 나서야” vs 李 측 “대책단 대응은 ‘타협 여지無’ 뜻”. <동아일보>.
- 최정아 (2018, 11, 8). 이재명 “김영환·김부선 불기소 의견 송치, 경찰의 ‘답정너’...우리 부부 망신 주기”. <동아일보>.
- 한상우 (2018, 10, 18). 유치원 감사 결과 ‘실명 공개’...“집단 휴업 · 폐업 엄벌”. <SBS 뉴스>.
- 한수연 (2018, 11, 20). “부담금은 원장 마음대로”...고사리손에 ‘가짜뉴스’ 배달. <MBC 뉴스>.
- 한우신 (2018, 10, 25). ‘조사 부실했지만 채용비리는 가짜뉴스’라는 서울시. <동아일보>.
- 허남설 (2018, 2, 4). “MBN 소송, 진주의료원 때처럼 끝까지 간다” 홍준표의 언론 길들이기. <경향신문>.
- 허남설 (2018, 2, 7). 홍준표, ‘성희롱 의혹 보도’ MBN에 5억원 손배소. <경향신문>.
- 허남설 (2018, 4, 29). 한국당, ‘홍준표 역풍’ 보도에 “추잡한 뉴스장사, 법적 대응”. <경향신문>.
- 허남설 (2018, 10, 10). 여당에서도 정부 ‘가짜뉴스’ 대응 비판. <경향신문>.



- 허동준 (2018, 6, 1). 법무-행안장관 “가짜뉴스엔 무관용 처벌”. <동아일보>.
- 허동준 (2018, 10, 17). 중대 가짜뉴스, 고소고발 없어도 수사. <동아일보>.
- 홍정수 (2018, 5, 7). “네이버, 단식기사 편향배치… 가짜뉴스 방치”. <동아일보>.
- 홍정수 (2018, 11, 17). 가짜뉴스로 김상곤 공격한 김용태… 2시간만에 “사과”. <동아일보>.
- 황성호 (2018, 6, 7). 성명서 명단, 폐북 생중계도 ‘교묘한 조작’. <동아일보>.
- 황성호 (2018, 6, 7). 지방선거 ‘가짜뉴스’… 4년전의 4배 난무. <동아일보>.
- MBC 뉴스 (2018, 6, 15). SNS 지라시·가짜뉴스 맹신 外. <MBC 뉴스>.

## 언론 보도에 나타난 가짜뉴스 담론의 속성과 사회적 실천 방향

강주현

(부산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강사)

이 연구는 언론 보도에서 다루는 가짜뉴스 사례를 통해 우리 사회의 가짜뉴스 속성을 파악하고, 가짜뉴스에 관한 담론이 각 행위자들에 의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했다. 또한 가짜뉴스에 관한 담론에 따라 사회적 실천 논의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의 언론 보도에서 나타난 가짜뉴스 이슈는 주로 정치영역의 소재였고, 각 언론사들은 공통적으로 가짜뉴스를 심각하게 인식했다. 가짜뉴스 낙인은 공적 사안에 관한 의혹 제기를 가짜뉴스로 규정하며 논의를 회피하도록 했다. 그리고 맥락적 담론보다 부분적 사실 오류에 매몰되도록 했고, 갈등 상황에서 상대측 해석을 사실 논쟁으로 접근하며 가짜뉴스로 낙인찍었다. 또한 추정과 논리적 비약이 클 수밖에 없는 온라인 이용자의 담론 특성을 간과하고 있었다. 그 결과 정치 담론의 구조는 담론의 취지와 맥락적 타당성을 제대로 논하지 못한 채 사실 여부에 대한 시비로 흘렀다. 언론사의 보도 담론은 정치 권력, 언론사, 사회적 맥락이 상호 관계를 통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정치 권력과 언론이 협력적으로 담론을 형성하면 가짜뉴스 담론은 규제에 초점이 모아졌지만, 언론이 사회 맥락적 차원에서 외부 전문가와 정치 이데올로기가 접합할 때 규제보다는 표현의 자유가 더 중시되었다.

**핵심어:** 가짜뉴스, 가짜뉴스 담론, 표현의 자유, 비판적 담론 분석